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1999. 12

건 설 교 통 부

목 차

제1편 국토의 여건과 전망 ····· 5

제1장 국토의 여건 ····· 5

제2장 국토의 문제점 ····· 7

제3장 여건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 ····· 8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 8

제1장 계획의 기조 ····· 9

제2장 5대 추진전략 ····· 9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 19

제1장 개방형 국토통합축 형성 ····· 19

제2장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 25

제3장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29

제4장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38

제5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48

제4편 시도별 발전방향 ····· 52

제5편 계획의 실천력 강화 ····· 53

제1장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 53

제2장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54

제3장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 54

부록 : 도면 및 2020년의 국토지표

제 1 편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1장 국토의 여건
제2장 국토의 문제점
제3장 여건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

제1장 국토의 여건

1. 자연적 여건

가. 위치와 영역

○ 아시아대륙 동북단의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

○ 길이가 약 1,000㎞에 달하는 반도와 3,200여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22.1만㎢, 남한은 총면적의 45%인 9.9만㎢

○ 간석지를 포함한 대륙붕은 약 50만㎢(남한은 34.5만㎢)로 국토면적의 2배가 넘으며 이중 약 80%가 서해안에 분포

나. 기 후

○ 겨울은 한랑건조하고, 여름은 고온다습한 온대계절풍 기후

○ 연강우량은 500㎜~1,500㎜(남한은 1,274㎜, 북한은 1,000㎜이하)이며, 1인당 강우량은 연간 3천톤으로 세계평균(3만4천톤)의 9% 수준

다. 지 형

○ 국토의 65.7%가 산지이고 척량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이며 농경지는 대부분 침식평야로 이루어짐

○ 하천은 구배가 급하고 계절에 따른 수량변화가 커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홍수위험이 상존함

○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우나, 서·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복잡하며 근해에는 많은 섬이 있음

○ 천연자원의 종류는 많으나 매장량과 경제성이 부족

2. 사회경제적 여건

가. 인구와 경제

○ 1998년말 현재 남한인구는 4,699만명(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0.8%수준이며, 인구밀도는 473인/㎢로 세계 3위의 고밀도 국가(인구센서스 기준에 의한 '95년말 인구는 4,461만명)

- 인구증가율(연평균) : 1.96%('50～'60) → 2.29%('60～'70) → 1.75%('70～'80) → 1.50%('80～'90) → 0.49%('90～'95)

- 남북한 인구('98) : 6,907만명(북한 2,208만명), 인구밀도 310인/㎢

- 도시(인구 2만이상 시·읍을 말하며, 도농통합시의 면 제외) 거주인구의 인구비율은 1960년 35.8%에서 1997년 85.9%로 증가

○ GDP('98기준)는 3,213억달러(450조원), 1인당 GDP는 6,920달러

- 경제활동인구('95) : 3,172만명
- 산업별 GDP 비율('97) : 1차산업 5.4%, 2차산업 28.9%, 3차산업 65.3%

나. 국토이용

○ 국토면적('98) : 99,408㎢

○ 토지이용현황('98) : 임야 65.7%, 농지 21.9%, 도시적 용지 5.2%(대지 2.2%, 공장용지 0.5%, 공공용지 2.5%), 기타 7.2%

【국토관련 주요지표의 변화추이】

지 표	1960	1970	1980	1990	1998
국토면적(㎢)	98,477	98,222	98,992	99,274	99,408
인 구(만명)	2,499	3,143	3,744	4,352	4,699*
GDP (조원)	0.2	2.8	38.0	179.5	449.5
도시화율(%)	35.8	49.8	66.4	79.6	85.9('97)

* 주민등록통계 기준

제2장 국토의 문제점

1. 국토문제

가.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 경제성장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사회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경부축의 인구비중 : 43.8%('60) ⇒ 73.3%('95)
- 경부축의 제조업체수 비중 : 56%('60) ⇒ 80%('95)

※ 1960~1995년중 경부축에서 약 2,200만명의 인구 증가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경제적 낙후와 투자부진으로 인구유출 지속

- 호남지역의 인구비중 : 23.8%('60) → 11.7%('95)
- 강원지역의 인구비중 : 6.5%('60) → 3.3%('95)
- 충청지역의 인구비중 : 15.6%('60) → 10%('95)

○ 특히 수도권에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지가 상승 및 주택부족, 교통, 환경 등의 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안보적 측면의 취약성 가중

- 전국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5.5%, 제조업체수의 55.1%가 집중

※ 외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 :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

- 정부투자기관의 80% 이상, 100대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등 중추관리기능은 더욱 심하게 집중

【수도권 집중현황】

구 분		전국 (A)	수도권 (B)	서울 (C)	집중도(%)	
					B/A	C/A
국토면적(㎢)		99,408	11,745	606	11.8	0.6
인구(천인)		46,991	21,365	10,389	45.5	22.1
제조업 ('97)	사업체(개)	92,138	50,727	18,104	55.1	19.6
	종업원(천인)	2,697	1,225	298	45.4	11.0
대학교 ('98)	학교수(개)	156	66	39	42.3	25.0
	학생수(천인)	1,448	586	381	40.5	26.3
금융	예금(10억)	246,310	162,302	122,012	65.9	49.5
	대출(10억)	201,056	123,980	92,602	61.7	46.1
공공 청사	중앙기관수(개)	36	25	15	69.4	41.7
	정부투자기관	18	15	10	83.3	55.5

나.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무질서한 개발관행으로 자연과 경관 훼손

- 해변, 강변,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난립
  • '94~'98중 2,500여개 숙박업소, 17,000여개 음식점이 준농림지역에 난립
- 획일적인 시설공급 및 고밀도 일변도의 개발관행 지속

○ 주요 하천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 심화

- 4대강 중하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상수원수 최하급인 Ⅲ~Ⅳ등급

○ 지구 환경위기와 자연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증대에 부응하는 국토환경보전 노력 미흡

- 무역과 환경문제가 연계됨에 따라 환경보전이 국가경쟁력과 직결

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 도로·철도·항만·공항·물류 등 기반시설 미비 및 교통수단간 연계 부족

- '80년대 이후 승용차 및 수송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의 GDP 대비 투자비율은 1.5~1.7%로 제자리 수준
- 도로, 철도간 연계를 통한 복합일관수송이 미흡하여 수송효율 저하

○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비용의 증가로 국민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물류비용('97) : 69.6조원(GDP의 16.5%), 연평균증가율 13.4%
- 교통혼잡비율('97) : 18조원(GDP의 4.4%), 연평균증가율 22.4%

○ 국토의 동서간 연결 인프라의 부족

- 전체 물동량의 70%가 경부축에 집중되고, 동서축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동서간 교류 및 안보적 대응차원에서 장애로 작용

○ 공항, 항만 등 국제교류에 필요한 교통시설부족으로 국제경쟁력 약화

라. 국토의 안전성 결여

○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

- 국민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개발에 투자되는 자원의 낭비 초래
- 건설기술이나 공법이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등 건설기반 취약

○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방재시스템 결여

- 상습수해지역의 상존, 화재·지진 등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 공항,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의 안전기반 취약

- 교통사고피해의 지속 증가, 위험물 운송차량에 의한 사고피해도 급증

2. 국토계획과 집행의 반성

가. 국토계획의 실천력 미약

○ 국토계획의 전략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책집행 및 노력 부족

○ 법, 재원, 조직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추진체계 미확립

○ 국토계획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결여

나.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시책의 미흡

○ 획일적인 산업단지 개발정책과 수도권의 규제시책에만 치중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의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효과 미진

다. 환경을 소홀히 한 개발관행 지속

○ 국토의 보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개발위주로 진행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이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

라. 세계와 동북아를 지향하는 국제적 관점 부족

○ 사람, 물자,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화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지닌 동북아의 관문기능을 육성·확보하기 위한 국토전략 부재

제3장 여건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

1.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동북아성장에의 적극적 대응

○ WTO체제하에서의 무한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간 교역이 증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예상

- 자유롭고 규제가 없으며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찾아 기업이 입지하는 국경 없는 산업입지추세 전개

- 국가경쟁력과 국부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증대

○ 국제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 증대

- 21세기는 중국의 개방화가 결실을 맺으면서 급격한 성장 전망
  ※ 중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2%('94) → 10%(2025)

- 동북아 중심에 자리잡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동북아의 교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경영전략 필요

2.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개발전략의 전환

○ 중앙집권적·관료적 사회에서 권한과 책임의 하부이양에 따른 분권적·자율적 사회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전

- 지방화시대가 성숙됨에 따라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경쟁력의 확보가 향후 지역개발전략의 핵심요소로 부각

- 주민존중 및 지역중심의 지방행정 보편화

○ 민간 및 외국자본을 동원한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이기주의의 심화와 지역경영마인드 고조

- 지역개발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중요성 부각

- 지역개발·관리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자체간의 갈등고조

- 지역의 개발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앙과 지자체,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개발절차의 민주화 필요

3. 지식정보화 세기에 적합한 국토여건 조성

○ 모든 산업의 지식정보화가 중요시되며 전자·생명공학 등 첨단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 21세기 경제발전을 주도

- 하드웨어중심의 중후장대형(중후장대형) 산업구조가 소프트웨어중심의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형(경박단소형) 구조로 변화

- 지식기반관련 산업의 고용 및 생산비중의 증대로 2010년에 지식기반산업은 생산의 48.6%, 수출의 54.1%, 고용의 48.4% 분담 전망

- 21세기 미래성장산업을 담을 수 있는 국토여건조성의 필요성 증대

○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거리가 극복됨에 따라 새로운 국토기간시설 확충의 필요성 제기

- 핵심정보를 선점하는 국가 또는 개인이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경제활동의 동시화·광역화·다양화 전개

- 국제교류의 확대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시설과 함께 첨단정보통신관련 기간시설의 사회적 역할 증대

4. 안정성장기로의 전환에 대응한 국토정비

○ 경제성장률이 과거 연 7~8%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안정 전망

- 대량생산의 공급자 위주 경제활동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수요자 위주 경제활동으로 변모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국토경영 중시

- 양보다는 질, 획일화보다는 다양화를 중시

○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2010년 이내에 인구증가 정체기에 돌입

-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여건 제공 필요

○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주기반조성 필요

- 도시화율이 '97년 86%에서 2020년 92%선을 유지하고, 도시의 교외화 현상이 지속되어 도시공간의 광역화 지속

【인구 및 산업관련 장래전망 지표】

구 분			1995	2000	2010	2020
인구관련지표	인구수	천인	44,609	47,275	50,618	52,358
	인구증가율	%	0.95	0.77	0.42	0.13
	14세 이하	%	23.0	21.6	19.9	17.2
	65세 이상	%	5.9	7.1	9.9	13.2
	경제활동 참가율	%	62.0	63.8	66.9	68.0
	평균수명	세	73.5	74.1	76.7	78.1
산업구조 (GDP 비중)	농림수산업	%	5.4	4.6	2.7	2.5
	제조업	%	28.9	28.4	28.0	25.0
	서비스업	%	65.3* ('97)	67.0	69.3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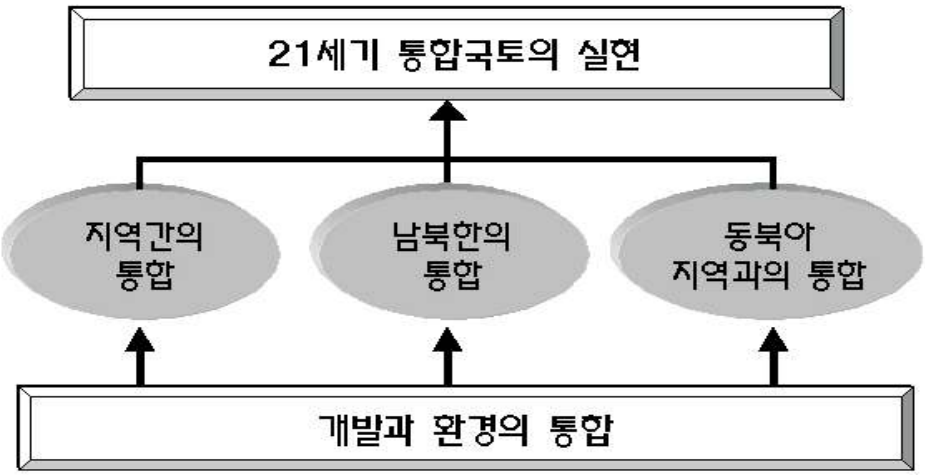
* 1997년 기준임

제 2 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기조
제2장　5대 추진전략

제1장 계획의 기조

1. 계획의 기조 :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2. 기본목표

가. 더불어 잘사는 **「균 형 국 토 」**

○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각 지역이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발전기반을 확보

나. 자연과 어우러진 **「녹 색 국 토 」**

○ 국토계획의 전분야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지구촌으로 열린 **「개 방 국 토 」**

○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교류국가, 나아가 세계경제의 주도국가로 도약

라. 민족이 화합하는 **「통 일 국 토 」**

○ 민족의 숙원인 남북의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협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통합」**을 도모

제2장 5대 추진전략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한반도가 지닌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교류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개방형 국토골격을 구축

- 동북아를 겨냥하는 신산업지대망, 국제허브공항·항만 등의 국제적 생산·교류기반을 새로운 국토축 중심으로 구축
- 신개방 전략거점으로서 무관세「자유항 지역」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외국인투자지역」육성 추진

○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에 걸맞게 성장하고 더불어 잘사는 통합된 국토골격을 조성

-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10대 광역권을 개발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성장과 세계화의 전진기지로 육성
- 분산되고 균형된 국토구조를 형성하여 안보차원의 부담을 경감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내 지역도 분업적 분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

○ 지방대도시의 산업별 수도화 전략과 함께 중소도시를 전문기능도시화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농산어촌을 도시와 연계시켜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이 보유한 자연·문화자원을「신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

○ 지역특성에 따른 입지수요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

○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7대 문화관광권을 설정·개발하고,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을 연계한「생태자원활용지대」를 구축

- 지역문화, 역사, 환경을 중시하는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구축으로 동북아 국제관광국가로 도약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하여 환경과 개발이 통합된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및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에 입각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도모

○ 살기좋은 주거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도시기반시설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

○ 유역권별 통합물관리체제 확립,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체제 구축을 통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4.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국제공항·항만, 고속철도 등 동북아의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물류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

○ 「디지털 국토」 형성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지식사회의 균등한 정보향유권리를 보장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접경지역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거점기능과 함께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여건개선 노력을 병행

○ 단절된 남북 연계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국토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물적기반을 조성

제 3 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제2장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제3장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제4장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제5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제1장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1. 기본방향

가.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린 개방형 국토골격

○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 환태평양권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으로, 국토 3면으로는 해양으로 뻗는 전략적 관문특성을 살려 동북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

- 상해 이북의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몽골, 남북한으로 구성되는 7억 인구, 총GNP 6조 달러의 거대한 동북아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

○ 국제허브공항, 국제항만, 대륙연계 철도망 등 육·해·공의 동북아 물류기반을 갖춘 개방형 국토여건을 조성

나.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있는 국토골격

○ 국토의 동서간을 연계하여 발전의 기회와 성과를 내륙으로 확산시켜 내륙과 연안지역의 상호보완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지방중심도시와 인근 지역, 신산업지대 등을 중심으로 지방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여 광역적으로 개발

- 여러 지역을 연계하여 상호발전하는 공생(공생)적 정주체계로 이행

○ 지방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균형성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의 응집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

- 국가안보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국토의 취약성도 보완

2.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구성

가. 국토 3면을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가는「연안국토축」

○「환동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극동 러시아·중국·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축

○ 「환남해축」: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축

○ 「환황해축」: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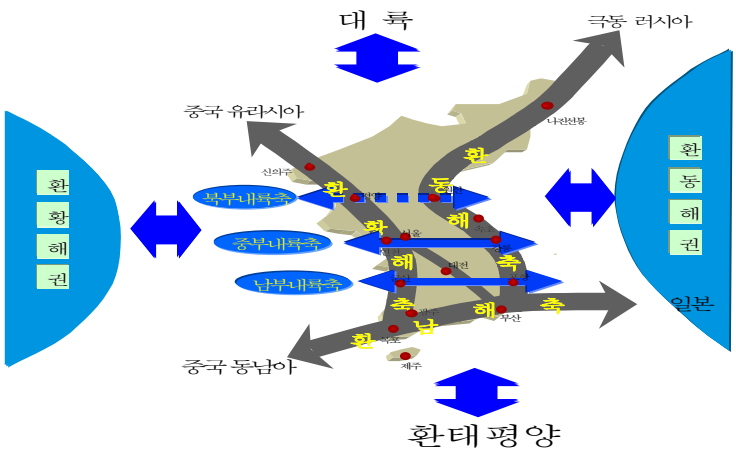
나.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동서내륙축」

○ 「남부내륙축」: 군산·전주~대구~포항

○ 「중부내륙축」: 인천~원주~강릉·속초

○ 「북부내륙축」: 평양~원산(통일이후 장기적으로 고려)

【개방형 통합국토축】



3. 국토축별 발전전략

가. 환동해축 :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 설악산～금강산의 국제관광 등 동해안지역의 관광루트 활성화
○ 포항(제철), 울산(자동차·중공업), 동해(자원가공) 등에 기간산업의 고도화 촉진

나. 환남해축 :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성

○ 부산항·광양항 육성,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마산·창원·진주·사천·광양·순천·목포 등 산업특화지대를 육성

다. 환황해축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지대망 조성

○ 인천～아산만～군산·장항～목포지역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의 육성 및 상호보완발전

※ 황해연안의 생태적 가치를 감안하여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라. 남부내륙축 : 영호남의 균형개발을 위한 연계 강화

○ 군산·전주와 무주～김천～대구～포항을 잇는 고속도로망 구축 및 지역간 공동의 문화관광사업의 추진,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연계교류 활성화

마. 중부내륙축 : 수도권기능 분산수용 및 산악-연안 연계관광 활성화

○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의 기능분산 및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산악·연안관광지역으로 특성화

바. 서울·부산축 : 산업구조개편 및 정비기반 구축

○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산업의 분산을 도모하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개편 유도

4.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전략

가.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 구축

(1)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 인천～아산만～군산·장항～목포～광양만～진주 등 환황해축과 환남해축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 복합기능의 단지조성, 배후지역 연관산업의 활성화, 산업도시간 연계강화

○ 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배후도시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개발

○ 물류·유통·생산자서비스, 전문인력 등 산업지원기능 강화와 친환경적 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개발

(2)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교통인프라 확충

○ 인천국제공항,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허브공항 및 중심항만으로 육성

○ 고속철도를 장기적으로 남북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교통망과 연계

(3)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

○ 지역의 신개방거점으로서 무관세 「자유항 지역」의 육성

- 국제공항, 항만, 산업단지, 배후도시 및 전문인력기반 등 경쟁력을 갖춘 국가적 전략지역에 지정·육성

- 물류, 중계무역, 가공생산 등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무관세로 보장하고, 기업하기 편리한 기반여건 조성

• 관세·소득세·법인세 등 세제혜택, SOC·첨단정보통신망의 구비, 문화·의료·여가시설 등 확충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육성

- 외국기업의 입지선호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육성

- 일정규모이상 투자의 경우, 기반시설 등 지원조건에 대한 정부-기업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되, 중앙정부지원은 지방에 집중하여 균형발전 도모

나.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10대 광역권 개발

(1) 광역권의 개발방향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균형개발의 거점형성

- 규모의 경제를 지닌 지역경제집적 기반 구축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발전 선도지역으로 육성

- 도로, 철도 등 광역적 교통체계형성과 용수공급 등 광역서비스 공급

○ 지역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

- 국제적 생산 및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공항·항만 및 고속정보통신망 확보 등 국제직교류기반 확충

(2) 광역권별 개발방향

○ 아산만권

- 대중국 교류증대에 대비한 물류기능 분담거점
- 수도권의 산업분산과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확보

○ 전주·군장권

-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 형성
-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영상산업의 육성

○ 광주·목포권

-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 광소자, 레이져, 광통신 등 첨단 광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

○ 광양만·진주권

-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및 항공산업도시 육성
- 영호남 협력개발의 시범지역으로 발전

○ 부산·울산·경남권

- 동북아 항만, 물류 및 국제교역중추도시 육성
-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화 및 고도화를 통한 재활성화

○ 대구·포항권

-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 강원동해안권

- 국제적 휴양·관광거점으로 육성
- 통일에 대비한 대북 경제·문화 교류거점 조성

○ 중부내륙권

-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내륙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개척
- 내륙물류기반 구축 및 친환경적 첨단지식산업 발전거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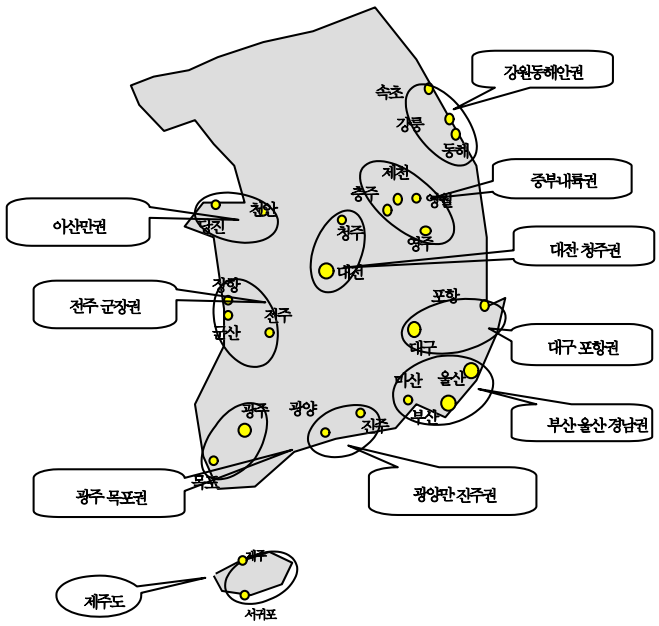
○ 대전·청주권

- 국가행정중추기능 분담 및 내륙국제교류거점 기능
- 과학기술·첨단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

○ 제주도

-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으로 아·태지역 관광·물류·금융·교역중심화
- 친환경적 농축산업 및 첨단 생명공학산업 육성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



제2장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1.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 추진

가. 수도기능의 지방분산과 체계적 정비

(1) 수도기능의 과감한 지방분산 추진

○ 중앙정부기관 및 권한의 지방분산 및 이양 확대

- 중앙정부기관의 과감한 지방분산추진 및 기존의 청단위 중앙정부기관 분산시책을 중앙부서 부·처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토지이용,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관리, 행·재정과 관련된 중앙정부 기능도 지역적 연관성이 높거나 집행성격이 강한 기능은 적극 이양

○ 기업·공장 및 금융기관 본사 등 민간 중추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 세제·금융·인프라·생활여건조성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

-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본사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에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주변 SOC건설도 지원

- 본사기능중 투자결정, 생산관리, 부품구입, 정보처리 등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촉진

(2) 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

○ 수도권에 과밀집중된 기능의 권역내 적정분산 도모 및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내 분업적 분산화 추진

- 수도권동부(전원도시지역) :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소규모 택지개발, 휴양촌, 첨단산업 및 연구단지, 휴양단지 등 종합적인 전원주거 및 휴양지대로 발전

- 수도권서부(국제교류지역) :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업무도시, 국제항만, 송도 미디어밸리 건설 등을 통해 복합수송·국제교역 중계·

업무기능 강화

- 수도권남부(산업·물류유통지역) : 아산만 광역권과 연계한 항만, 유통기능 강화 및 수도권내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계획적 입지제공을 통하여 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발전
- 수도권북부(남북교류지역) :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조성과 접경지역 개발·관리를 통한 남북교류 기능수행

○ 도시구조의 재편과 비계획적 도시개발 억제

- 도시지역의 공간구조를 직주근접형으로 재편하고, 부도심 및 서울 주변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자족적 다핵구조 형성
- 도시·산업개발의 규모와 입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광역도시계획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양적 성장과 비계획적 도시개발 억제
- 환경·건축·토지이용기준 등을 지방보다 강화하는 조치 병행

○ 수도권 과밀과 집중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공공투자 및 정부재정지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지양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수도권집중억제 기조 유지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수도권 지역비중을 적정화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 추진
- 공장 및 대학정원총량제 등 수도권 집중억제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국민주택기금배정, 공공택지개발 등에 있어 적정관리 도모

(3) 수도권의 국제기능 강화와 세계도시로의 발전기반 구축

○ 국제기능 수행을 위한 물적 기반 및 전문적 서비스 산업 육성

- 국제적 교통·통신시설 확충 등 국제교류시설기반 강화
- 컨벤션센터, 초고속정보통신망, 첨단기술·정보도시 기반조성 등
- 정보통신산업, 컨설팅, 디자인, 마아케팅, 법률 등

○ 서울은 국제금융·교역·업무 및 문화교류기능을 육성하고, 다국적 기업의 홈베이스화 추진 등 세계도시로 육성

○ 영종도·인천은 국제물류·수송·정보 및 첨단기술 수용의 거점역할 수행

-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공항배후도시,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 등

나.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전문기능도시화

(1)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육성

○ 특정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적극 분담

- 과학기술산업수도,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 자동차산업수도, 메카트로닉스산업수도, 첨단광산업수도, 문화컨텐츠산업수도, 스포츠산업수도 등

- 특정산업군의 본사기능, 지원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해당분야 인재양성의 중심지로 육성

○ 도시의 산업구조적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도시 스스로 특정부문을 선택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

- 10대 광역권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지방대도시가 광역권별로 특화된 발전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육성

- 지역별로 수립·추진중인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하고 국가전체의 산업발전전략과 조화되는 육성전략 추진

(2) 중소도시를 전문기능도시로 특화·육성

○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 육성

- 대학도시, 첨단기술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산업도시, 보양도시, 관광휴양도시, 생태도시 등

○ 중소규모 시범도시육성 및 시범적·선도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생태시범도시, 관광이벤트, 연구단지조성, 문화·역사거리조성 시범사업 등

○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함으로써 대도시와 차별화된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

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 개척

(1)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 유도

○ 친환경농업 및 농법도입으로 친환경·고품질의 농수산품 개발

- 자원절약형, 부존자원이용형 농업경영확산과 가축퇴비, 완효성비료, 미생물을 활용한 농약개발 등 친환경적 농업기술 개발

-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및 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첨단영농기법 도입으로 농수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

- 농수산품 가공을 통한 차별화·브랜드화, 특수작물 상품화, 수출촉진을 위하여 경영·유통 등에 대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농업과 농촌의 재도약을 위한 새천년 농업정책 추진

(2) 농촌의 지역경제기능 다원화와 복합산업공간화 추진

○ 인근 주변지역의 주력산업군집과 연계한 부품산업 유치 및 농수산가공산업, 여가관광기능 확대로 도농교류촉진을 통한 소득증대 유도

- 자연환경, 먹거리, 놀거리 등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 관광농원 확대 등 그린 비지니스, 그린 투어리즘 활성화

○ 지역특산물 활용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취업기회제공 등 생업기반확대

(3) 낙후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을 「신자원」으로 활용·육성

○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가진 수려한 자연경관, 갯벌·도서·산촌 등의 지역적 특성, 생태·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생산·여가지대로 육성

○ 유형별 개발전략

- 도서지역

• 갯벌 등 해양생태, 경관자원을 활용한 신해양 산업공간으로 활성화
• 해양관광, 도서지역의 문화관광화, 해양자원개발 등을 촉진
• 육지와의 접근성 개선과 도서간 연계강화를 위해 연육·연도교 건설지원

- 산간지역

• 휴양·보양, 전원형 연구산업활동 등 자연과 일체화된 생활공간 조성
•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포장 및 정보 인프라 확충
• 경관, 생태 및 특산자원 상품화,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 지원

- 폐광지역

• 폐광시설의 관광자원화, 새로운 산업유치 지원
• 지역산업쇠퇴·전환에 따른 직업교육·재훈련, 고용연계 프로그램 지원

- 접경지역

• 도로·철도·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과 주민생활 및 복지기반 확충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한 접경지역내 경제·문화·환경중심의 교류협력 기반 확충과 비무장지대 등의 생태보전

(4)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 도로신설, 물류기반구축 등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주거설비 및 근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원격교육, 원격의료, 노인의료 및 구급서비스 확대, 홈쇼핑 등 정보화를 통한 도시적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보급

2.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

가.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 입지선정, 규모 등 산업입지의 조성은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등의 입지수요에 맞게 추진

- 정부주도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의 산업입지 공급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주체와 개발방식 다양화

- 사업시행자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환지방식 등 다양한 개발기법 도입

○ 산업정책방향과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보,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의 총체적 지원체계 구축

나.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 공급

○ 정보통신, 생산기술의 혁신에 따른 유연적 생산체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 형성 지원

○ 지역주력산업의 지식화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섬유 등 기존산업의 지식화 및 고부가가치화

-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정보제공(IP)산업, 문화산업, 신소재, 생명공학, 패션·디자인 등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여건 조성

○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쳐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벤쳐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 기반시설확충,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 세제·금융, 기술인력, 투자회사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상수원 원류지역 등 환경보전차원의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환경친화형 청정산업지대 육성 추진

○ 지역거점화, 특성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실리콘밸리 구축

- 연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심도시에 첨단기술산업을 중점육성
- 특정업종 중심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
- 지역간 고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인력·기술 등을 교류

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전환지대」 설정

- 산업의 쇠퇴화로 실업증대, 지역경제 침체의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신산업유치 및 기존산업의 고도화·구조조정 지원

- 지역산업구조전환을 위한 기업·고용보조금, 기술개발 및 재교육 지원금, 지역SOC투자 지원, 개발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

○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제 도입

- 낙후지역, 전략적 육성지역 등에 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설정

- 도시기반시설 확충, 세제·금융·기술 등의 집중지원, 토지이용, 행정규제의 완화 등 기업활동촉진을 지원

라. 기술개발과 창업지원기반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창업촉진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산·학·연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 지역대학중심의 기술혁신지원센터 설치

-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창업과 지역기업의 전문인력에 의한 파생창업(Spin-off) 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의 생산, 인허가, 마아케팅, 경영 등 교육과 지원을 위한 지역별 창업보육기능, 벤쳐자금 등 창업금융 확대

- 지역별 엔젤투자그룹 육성, 창업기업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엔젤마트, 창업정보망 등) 구축

○ 지역기업활동의 지원기반 구축

- 산·학·연 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내 첨단정보인프라 확충

- 지역내 신용보증 및 여신지원강화를 통해 지역조성자금의 지역내 산업에의 투자촉진과 지역자본시장 육성

- 지역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산업수도화와 연계하며, 지역별 특성대학 육성 및 지역인력활용에 대한 지원강화

3.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가.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1)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감안한 문화·관광권의 설정

○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개발하고, 루트화·벨트화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화·관광권의 설정

- 문화관광자원의 특성, 자원의 집적성, 접근교통체계, 행정구역 등 고려

○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개발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공간을 제공

【7대 문화관광권 및 특화주제】

문화관광권	특 화 주 제	해당 광역지자체
수 도 권	국제적 도시, 전통문화와 관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 원 권	남북교류와 4계절관광	강원도
충 청 권	백제문화와 해안·산악휴양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호 남 권	테마형 전통문화와 해양관광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경북권	전통문화와 섬유이벤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	국제도시와 해양관광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 주 권	아·태지역 중심관광	제주도

(2) 권역별 개발방향

(가) 수도권

○ 중추관문지역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유적 자원의 정비와 상품화로 대표적인 한국적 문화전시지역으로 육성

- 컨벤션센타, 국제박람회 시설과 함께 한국풍의 호텔 등을 건설
- 문화예술전시장, 공연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한국적 도시경관을 조성

○ 접경지역, 해안, 내륙 등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관리

- 접경지역 : 통일안보 및 생태관광 중심으로 육성
- 강화지역 : 인천국제공항, 역사문화자원, 수려한 해양관광자원 등을 연계
- 옹진, 시흥, 화성지역 : 역사문화와 함께 해양리조트형 복합단지로 개발
- 내륙문화·자연지대 : 대도시권 배후의 문화관광·위락활동지역으로 개발

(나) 강 원 권

○ 동해해양자원과 백두대간의 산악·고원자원을 연계한 국제적인 종합 리조트를 조성하여 4계절 관광지로 육성

- 국제공항·국제항만 및 내륙과의 간선교통시설을 확충

○ 금강산·설악산 등 남북한 공동개발사업 추진으로 문화·관광 교류 거점으로 육성

- 우선 항만을 이용한 국제적 관광지대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육상을 연계한 직접적 공동개발 모색

(다) 충 청 권

○ 백제문화권·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유산, 속리산·월악산의 내륙 산악관광 및 해안관광지대를 연계한 문화·휴양지대로 육성

○ 지역이 보유한 문화, 자연관광자원의 특성에 맞게 개발

- 백제문화유적이 집중된 부여, 공주 및 중원문화권지역을 문화·유적 도시로 관리

- 무주～속리산～화양계곡～월악산～소백산의 내륙산악관광지를 고원휴양지역으로 육성

- 서산, 보령, 서천 등 내포문화권 해안지역은 인근 신산업지대 배후의 환황해권 해양관광지로 육성

(라) 호 남 권

○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관광리조트 유치

- 백제문화, 음식문화, 시가문학, 차문화, 남도회화, 소리문화, 도자기 순례 등 각종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용편의시설 확충

- 공룡화석, 고인돌, 옹관고분 등 선사문화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조성

○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 등 다도해지역의 국제관광단지 조성

- 지리산 등 내륙산악지역 및 제주도와 연계개발을 통해 국제적 종합리조트 지역으로 육성

- 도서지역 등 접근불량지역에 대한 항만 및 연육·연도교 등 접근시설 확충

(마) 대구・경북권

○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자원과 안동의 유교문화자원을 지역고유산업과 연계하여 이벤트관광지역으로 육성

- 경북북부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 유교관광명소화

○ 울진·영덕·울릉도·독도 등 해안지역과 내륙산악지역의 관광자원개발

- 동해안지역은 내륙과의 항공 및 간선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
- 내륙산악지역은 인접 지역과의 공동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 유도

(바) 부산·울산·경남권

○ 동·남해안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가야문화유적을 부산의 관문기능과 묶어 국제적 해양 문화·관광리조트 지역으로 육성

- 연육·연도교 확충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연계개발 유도

○ 서부 및 북부 산악지역을 인접지역과 공동개발하고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배후 관광·위락지대로 육성

- 지리산, 가야산, 가지산 등을 중심으로 한 산악·고원지역을 대도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사) 제 주 권

○ 천혜의 한라산과 해양자원을 고유의 제주섬문화와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대표적 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

-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병행하여 국제물류, 교역, 금융기능과의 연계 도모

나. 지역발전과 관광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

(1)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방향

○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를 조성하여 이를 경부축에 대응한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국토개발과정에서 낙후되어 온 지역들이 보유한 수려한 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차원의 지원 강화

○ 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을 잇는 지역과 이에 인접한 낙후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 백두대간의 보전을 전제로 친환경적인 관광휴양산업을 활성화

(2) 생태관광(Eco-Tourism)의 정착과 확산

○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원칙의 정립

- 대규모의 획일적 관광개발보다는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림으로써 환경과의 조화 도모

○ 공원체계를 강화하고 생태네트워크를 회복하여 문화관광환경 증진

- 갯벌, 호수 등 습지와 자연경관지 및 관찰지역을 국·도립공원으로 지정
- 한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낙동강 등 강과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하여 공원화하고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수변공간 개발
- 녹지지역과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자연보도망 확충

○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연탐방문화 조성

- 민간환경단체 및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태탐방 및 기행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기존 주민이용시설의 정비 등 생태관광의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인책을 강구

다. 국제적 관광지역의 전략적 개발

○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도시로 육성

- 천혜의 한라산과 해양자원을 고유의 제주섬문화와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대표적 관광지역으로 육성

- 제주도 전역에 무비자, 무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유로운 관광지로의 기반을 강화

○ 남북관계진전과 연계하여 금강산~설악산 연계 국제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관광지로 육성 도모

○ 동북아 주요관광거점을 연계하는 오리엔탈 크루즈 상품개발 적극추진

- 천진~서해안~제주, 상해~남해안~큐슈, 북해도~한반도 동해안~일본 서해안~러시아 연해주를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 개발

○ 국제공항·항만지역에 국제적 관광전문시설의 확충

- 복합컨벤션센터, 무역센터 건립 등 국제회의, 국제전시시설의 확충

라. 지역문화·역사·환경중심의 문화관광기반 조성

(1) 지역문화와 자연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역

○ 역사·문화유적 등 문화적 특수지역을 문화권으로 묶어 백제, 신라, 가야, 탐라, 중원 등 문화유적지역을 정비·확충

○ 안동, 강화, 지리산 지역 등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 역사, 동질적 환경속에서 다양한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지역을 문화권으로 개발

(2) 문화관광상품의 다양한 발굴・확충

○ 문화촌, 전통문화학습장 조성 및 문화유적지역의 정비개발

- 백제, 신라, 가야, 안동・남도문화촌, 무속설화촌 등 문화관광촌 조성
- 민속촌, 도예촌, 문화유적지, 문화관광단지 등에 전통문화학습장 개설
- 강화도, 거제도, 완도・청해진 등 전적지, 유적지의 복원 및 개발

○ 문화재, 전통시장 등 우리만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축제 상설화

- 종묘, 팔만대장경, 석굴암, 불국사 등 문화유산과 연계한 이벤트 추진

- 광주비엔날레, 여수세계청소년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세계도자기축제, 제주섬박람회, 강원 국제관광엑스포, 부산국제영화제 등

-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설

• 서울 남산한옥마을, 안동하회굿, 보성・해남 서편제, 남원 동편제 전수관, 양주별산대놀이, 강릉 단오제 등 지역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전문특수박물관 및 문화예술관 확보

- 음식, 종가, 문화유적, 차, 도서, 사찰탐방 등 주제별 탐방상품을 개발하고, 고유무술, 악극, 창 등을 관광상품화

○ 자연과 농산어촌생활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급류타기, 번지점프, 활공스포츠 등 모험관광활동

• 내린천・평창강의 래프팅, 평창・영월・춘천 등의 활공, 제주 열기구
• 안산・태안・제주의 경량비행, 남해・제천・청평 등의 번지점프

-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모습을 관광상품으로 활용

• 허브가든, 갯벌, 탐조여행 등 생태관광
•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농어촌에서 체류하면서 인정을 느끼는 관광상품
• 자연학습형, 주말농장형, 심신수련형 등 다양한 농산어촌경험이 가능한 시설확충

마. 지자체간 공동의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

○ 남해안 국제관광벨트의 구축 :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

-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구축

- 지역간 고속도로, 공항 및 항만 등 기반시설확충 및 외자유치 모색
- 리아스식 해안의 돌출된 반도지역을 연결하는 연육·연도교 건설
- 기반시설 설치시 미관을 중시하여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 동·서해안의 「연안관광벨트」 개발

- 경기만, 태안반도, 전남북 해안지대를 연결하는 서해안 연안관광벨트
- 강원도·경북·울산·부산 해안지대, 울릉도·독도를 연결하는 동해안 연안관광벨트

○ 지리산통합문화권의 체계적 개발

- 남원～장수～함양～산청～하동～구례～곡성의 3개 도, 7개 시군에 걸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대표적인 영호남 협력 및 화합사업으로 개발

-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문화유적을 연계하여 국제적 문화·생태 관광지대로 조성

○ 기타 여러 도에 걸치는 광역의 문화·관광지대를 지자체간 공동으로 개발사업 추진

- 덕유산주변 5도 지역(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무주～영동～김천～거창～장수～진안～금산

- 월악·소백산 주변 3도 지역(강원, 충북, 경북)
  : 태백주변지역～영주·안동 주변지역～단양주변지역 등

- 기타 : 충주호 주변지역, 섬진강유역 등 호소·강 유역

제3장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1.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가.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1) 환경과 개발의 통합관리

○ 지역개발, 산업입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관광, 도시관리, 자원관리 등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도입

- "환경의 세기"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건설, 선진환경기준 및 수단확보 등에 관한 범정부적 협력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녹색 GNP(Green GNP), 환경세의 도입, 환경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범국가·범정부·범지자체적 정책 추진

- 공급위주의 개발에서 수요관리·생태순환형 개발을 병행

(2)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의 마련 및 준수

- 계획·설계·유지관리 등 개발사업 전과정에 적용
-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협의내용 준수

○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환경영향평가수단 도입

-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검토
- 환경오염, 산림감소, 갯벌파괴 등을 환경비용에 포함시켜 종합비용편익 분석
- OECD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성평가(SEA) 등 도입 추진

(3) 건설분야의 자율환경관리기반 구축 및 환경시범사업 추진

○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건설환경관리법 제정 또는 건설관련법의 개정·보완을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촉진

○ 기업환경회계 도입 등을 통해 강화추세인 기업환경기준 및 ISO14000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

○ 환경시범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 생태마을, 친환경 산업단지, 친환경 고속도로, 친환경 댐, 생태공원 등
- 우리 지형·기술실정에 맞는 한국형 환경선도기술을 실용화하여 보급
- 환경시범사업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지구 및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국토정책의 대응전략 수립

-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의제 21」의 지속적 이행과 실천
- 우리국토의 실정에 맞는 지구환경보전 실천방안 적극 발굴
-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중장기 적응전략 수립·추진
-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뉴라운드」협상에 대비한 사전대응대책 마련 및 환경협력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국토자원에 대한 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

- 기상이변에 따른 수자원 특성, 농작물한계선 및 생태계의 변화, 연안역 침식 등 기후온난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자원·에너지절약형 국토개발기술과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추진

○ 황해오염, 산성비 문제해결을 위한 황해보전, 동북아 대기보전 공동조사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력 등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강화

- 동북아 폐기물 재활용네트워크,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구축, 대단위 생태복원사업 등

- 한반도 환경비전의 공동수립 등 남북한지역의 균형된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남북한 환경협력기반 조성

• 백두대간 생태보전 등 남북한 환경보전공동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협력도모

나.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생태계 보전과 복원 추진

(1)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의 구축·관리

○ 주요산맥, 10대 강, 3대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적 생태관리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백두대간, DMZ, 습지 및 갯벌, 하천 및 계곡, 대형호소, 국립공원 등을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와 연계

○ 야생동식물의 이동성과 다양성, 물순환의 건전성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관리와 복원사업 추진

- 전국 공원화·생태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산·하천·연안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증진하고 다양한 생물상 서식환경 조성

• 토종 동·식물복원사업, 5대강 생태복원사업, 갯벌 생태복원사업 등
• 반딧불, 두루미, 어름치 등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지 보전·복원사업

- 단절된 한반도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남북한 공동생태복원사업 추진

(2) 산림생태계 보전과 복원

○ 백두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주요 명산의 녹지생태축의 복원 및 개선사업 추진

- 자연휴식년제의 확대 실시 및 녹지생태축상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재평가와 복원사업 추진

-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400㎞의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간, 지자체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추진

• 간선도로와 백두대간이 교차하는 47개구간에 생태이동통로 조성

○ 산지에 경관·생태와 조화되는 친환경적 연구단지, 전원주거단지, 문화·여가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시적 용지수요를 충족

-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해 산지이용 구분체계를 마련하여 보전 및 이용대상 산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산지전용시 타당성평가제 도입 추진

- 고도, 용적률, 식재, 생태계 복원, 기반시설 등에 대한 산지이용지침을 제도화하여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의 도입 및 준수를 의무화

○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하여 「제2의 녹화」사업 추진

- 체계적인 조림과 간벌사업으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배양
- 유역별 산림관리계획 수립·추진으로 녹색댐 기능과 수질정화기능 제고
- 산림의 보전과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종을 식재

○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매장위주의 장묘관행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화장·납골시설의 현대화 및 관련제도개선을 통해 묘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토잠식을 방지

○ 국립공원 등 보전지역 지정시에 해당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밖에 에코마을을 조성하는 등 생활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창출

(3) 하천생태계 보전과 친수공간의 확대

○ 10대 유역권별 수질·수량·생태계의 보전과 물순환의 건전화 촉진

- 산림 및 농경지의 적정관리 등 유역권 종합정비 추진
- 도시 및 하천하류의 우수침투능력을 보강하여 물순환의 건전성 회복

○ 환경친화적 하천조성과 다양한 수변공간의 보전과 창출

- 하천의 생태적 기능 강화와 복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지침의 정비 및 자연하천복원사업 추진
- 소하천, 도시하천정비로 다양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친수기능 강화
- 바다와 강으로부터 일정거리의 수변구역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시설물(음식점·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폐수 등 환경기준 및 감시체제 강화
-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오염총량제를 추진하는 등 자연과 결합된 친수공간으로 유도

○ 유역공동관리를 위한 상·하류지역의 협력방안 모색

- 댐 수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원지역의 생활정비 및 지원대책 추진
- 유역권별 광역협의체, 상호교류회 등의 활성화로 하천공동관리사업 추진

(4) 연안환경 및 갯벌의 보전

○ 3대 연안의 자연특성, 지역개발수요, 환경용량 등을 고려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연안지역의 체계적 관리 도모

○ 서남해안 주요갯벌 및 다양한 동·식물 서식 해안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공원 등을 조성

- 대규모 간척·매립, 김양식업 등은 가급적 지양

○ 연안오염의 방지 및 연안환경의 보전

- 적조발생 및 오염심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
- 침수, 침식연안의 재해방지 및 관리계획 수립

다. 환경오염의 예방과 적극적 치유

(1)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물질배출의 최소화

○ 녹색 생산·유통·소비체계의 정착을 통해 소비압력을 최소화

- 환경친화기업을 육성하여 생산·유통분야의 환경오염배출을 최소화
-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에 환경마크 부여

○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으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자원화 촉진

-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 운동의 전개
- 절전형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 및 폐열의 이용 확대
- 태양열, 풍력, 조력 등 환경오염이 적은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
- 쓰레기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의 지속적인 추진

【폐기물 관리실천계획】

구 분	1997	2005	2010	2020
폐기물발생량 (kg/인·일)	1.05	1.03	1.0	0.9
재활용률(%)	29	42	45	50
매 립 률(%)	63.9	40	30	20
소 각 률(%)	7.1	18	25	30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입지와 관리강화

- 폐기물관리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처리시설은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선호시설 등과 함께 조성하여 님비(NIMBY)문제 해소

- 유해성이 큰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광역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 토양오염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증대를 위한 합리적 기준의 마련 및 건설현장간 상호 재활용정보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최소화 기술개발·보급

○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등 토양오염 지역의 복구와 안전한 토양관리 도모

(2)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

○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개선

- 아황산가스(SO_2), 총먼지(TSP) 등 대기환경기준을 WHO권고기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경제적·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대기오염 해소대책 추진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등 오염배출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이 심한 공단지역 등을 특별관리

- 도시림 조성, 공원·녹지확충 등의 지속추진으로 자연의 대기정화기능 제고

○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지역난방의 확대

- 대기오염실태 및 청정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황함량이 적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을 기존 35개 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확대

- 열병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난방을 확대하여 지역대기질 개선

○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추진

-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및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등을 추진
- 버스 연료를 저공해의 천연가스(CNG) 등으로 점진적으로 교체
-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교통수요관리(TDM) 정책을 강화

(3) 강·호수·바다의 수질개선

○ 주요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 등급으로 개선

- 단계적으로 수질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총량규제 확대
- 고도처리 및 자연의 정화능력을 활용한 수질정화기술 개발

○ 분류하수관거의 확대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합리적인 운영

- 우수·오수 분류하수관거 보급확대, 노후관 개량, 하수도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하수처리율 제고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민자유치·민영화 추진

【생활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

구 분	1997	2005	2010	2020
하수관거보급률 (%)	63.5	80	90	100
하 수 처 리 율 (%)	57	70	80	90

○ 비점오염원의 특별관리대책 추진

- 용수원 영향지역은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

- 하천유역 산업입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역별 환경용량범위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

○ 호소 및 하구호 등 담수호의 특별관리대책 추진

- 호소별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도모
- 낙동강하구호, 금강호, 시화호 등 하구호의 수질정화대책 추진

○ 지하수오염 예방대책의 추진

- 지하수 수량·수질통합측정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하수개발총량제, 폐공예치금 및 원상복구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양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특별관리해역의 지정확대 및 관리강화

- 오염심화 및 적조발생 우려지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 준설사업 추진

- 연안오염총량규제 실시를 통해 배후 영향권의 유입규제 강화

- 연안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적조방지대책의 추진

• 연안 하수처리율 제고: 39%('97) → 80%(2020)

- 방제선, 오일펜스 등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보강하고, 주요 항만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유류사고방재 및 예방

○ 오염행위 상시감시 및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 수질오염사고 취약지구에 상시수질측정망 설치로 오염행위 미연방지
- 수질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

라.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구축으로 난개발 방지

(1)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제 확립

○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원칙을 정립

- 자연공원, 생태계 및 문화재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생태축, 용수원 영향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대상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배제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 등 농지필요량(약 17,000㎢) 확보

- 개발가능한 지역도 「선계획 후개발」원칙을 엄격히 적용

• 도시, 준농림지역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환경보전대책 수립
• 지역환경용량 등을 고려한 개발규모 및 입지, 용적률, 건폐율 등의 합리적 조정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체계 통합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그 밖의 개별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 규제 내용을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

○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중요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행정구역단위로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에 맞게 통합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지자체는 통합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관할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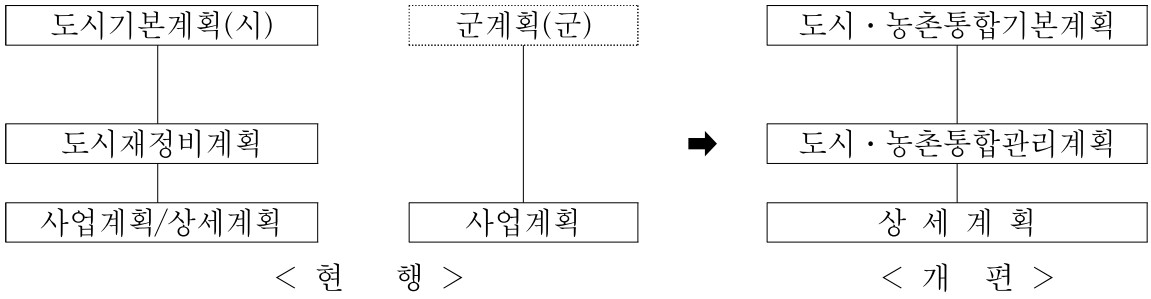
- 광역적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지역의 지자체들(시·도 및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광역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광역토지이용계획이 통합토지이용계획 및 전국적인 계획이나 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의·조정

○ 통합토지이용계획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는 도시·농촌통합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 현행의 도시계획, 시군계획 등을 발전시켜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도시농촌통합관리계획-상세계획으로 일원화

【공간계획체계개편 구상】



○ 계획허가제 도입 추진

- 통합토지이용계획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계획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통합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
-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개발예정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허용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축소하고 계획규제를 최소화
-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허가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기반시설 설치

(2) 복잡다기한 토지이용제도의 정비

○ 15개 중앙부처가 제각기 지정하여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무질서하게 이용하고 있는 160여 지역지구제를 토지적성에 맞게 정비

- 행위규제내용과 지정목적이 비슷한 지역지구를 토지특성에 맞게 정비
- 지역·지구·구역별로 규제하고 있는 토지이용내용을 토지이용행위별로 관련 법령을 표준화하여 토지이용규제의 중복 또는 상충 해소

○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구역은 통폐합하며, 계획으로 전환가능한 지역·지구·구역은 계획에 포함시켜 질서 있는 토지이용도모

○ 토지이용 및 국토이용계획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토지이용 및 관리의 위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지구 고유번호제(Coding System)를 도입 추진

- 필지별로 등재된 고유번호에 따라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와 토지이용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을 해소

○ 일정기간(10년)마다 지역지구지정 필요성을 심사하며, 신규로 지정하는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3) 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 토지세제 개선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 보유과세에 비해 중과되고 있는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과세는 완화하여 시장동결 효과를 해소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로 보유과세를 중과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

-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개발이익 환수기능을 강화

○ 보상수준과 보상방법의 현실화 등을 통해 토지보상제도 개선

- 장기사업은 실시계획 수립시 일괄보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손실보상제도를 간소화하고, 영업보상, 실농보상 등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용지취득 및 보상업무 전담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

○ 공동체이익 우선의 토지이용규범 형성과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4) 지가안정을 위한 토지시장관리의 과학화

○ 부동산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공시지가의 기준가격개념을 감정가격에서 시장정보로서의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

○ 행정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통합관리

- 지적, 종합토지세, 토지등기부, 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 등의 전산화 자료와 건축물 관련정보 등

○ 규제위주의 토지정책을 토지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의 토지보유 확대

- 비축대상토지는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도시외곽 개발가능지, SOC 등 기간공공시설 예정지 등으로 설정

○ 토지자산 증권화와 부동산투자신탁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투자시장을 육성

2.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가. 주거공동체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

(1) 공동체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

○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을 확충

- 규모, 밀도,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지중심으로 주거공급
-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주택건설기준을 마련
- 건축기준, 조경기준, 가로환경 기준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설정

○ 공동체의식, 한국성을 강조하는 설계 및 단지조성기법을 개발·보급

- 대중교통체계를 기본적인 연계수단으로 하고, 단지내에서 도보에 의해 연결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주거단위 형성
- 한국의 전통마을 설계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

○ 주거단지내 주민공유공간 및 개방공간을 충분히 확보

- 공동세탁장, 놀이방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활동을 촉진
- 거주자간의 관계망 형성 유도로 공동체 귀속감과 동네의식 고취

○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 단지안에 개방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이용과 주민활동을 연계 (예: 생필품 공동구매 활동)

(2) 친환경적 주거공동체 조성

○ 자원절약적·환경친화적 주택 조성

- 온실을 이용한 채열·축적, 태양전지 냉방, 태양열집열기 보급 등
- 중수도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를 저수구에 모아 활용
- 쓰레기 자가처리시설 확보로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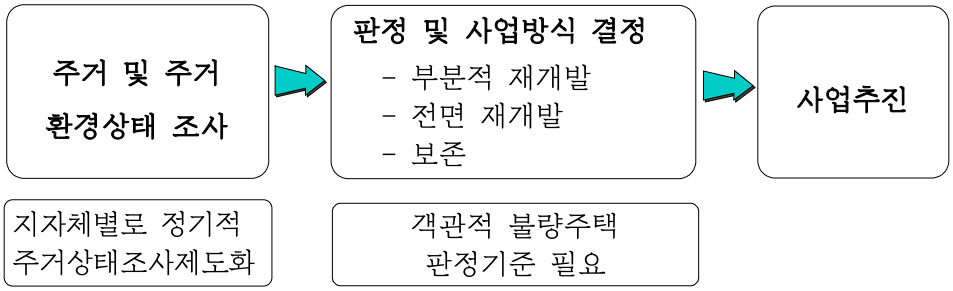
○ 인체에 해를 끼치는 건축자재사용을 피하고 천연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적 습도조절기능이 가능한 실내공간 마련

○ 주거단지내 생태공간 및 친수공간 확보

(3)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추진

○ 공동체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에 통합, 정비

【주거환경개선 절차】



○ 지자체단위별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을 의무화

- 공동체 단위별로 “주거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를 취합하여 주택과 환경상태에 따라 등급 부여
- 공동체간·지자체간 경쟁 유도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효율화 도모
- 서민주거안정, 기존 주택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동체 의식 함양

(4)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유형의 다양화

○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 다양화

- 동호인주택, 장애인편익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 물리적으로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기초시설 확충

○ 가변형 설계기법 도입 활성화

- 가족생활주기변화 및 선호변화에 따라 주택내부의 평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마감재선택형, 평면주문형, 가변형, 골조·내장분리공급, 병합형 주택 등

나.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의 주거정의 실현

(1) 2000~2020년간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

○ 계획기간중 연평균 3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2002년 100%, 2020년에는 106% 이상으로 제고

- 2000년 초반에는 연 40만호, 2020년경에는 연 30만호 내외 건설

○ GDP대비 주택투자율을 2004년까지 평균 5%, 장기적으로는 3% 내외유지

(2) 저층, 중저밀도의 주택공급 확대

○ 신축주택의 공동/단독주택 비율을 현재의 9:1에서 2004년까지는 8:2, 2005-2009년 7:3, 2010-2014년 6:4, 2015-2020년 5:5로 하향조정

○ 공동주택 개발밀도(용적률기준)를 전국도시평균 200% 수준으로 하향 조정

(3)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 신규소요택지의 40%를 재개발, 재건축 또는 나대지활용 등 기존시가지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고 60%는 신시가지,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조성

○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택지개발예정지를 사전에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도시기본계획에 사전 명시)

○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근교 녹지 및 농지의 선별적·단계적 개발 추진

(4)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을 2000년대 초반까지 연 10만호 이상 공급하여 총주택 재고 중 임대주택 비율을 10%수준 이상으로 제고

- 향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하는 영구임대로 공급하는 방안 추진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국 가 (도시)	영국 (런던)	미국 (워싱톤DC)	프랑스 (파리)	일본 (동경)	핀란드 (헬싱키)	캐나다 (토론토)	홍콩	싱가포르
비 율	21	1	30	8	31	8	64	79

자료: The Housing Indicators Program, IBRD, 1992

○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수익성 제고
- 민간의 임대주택개발사업에 대해 택지의 우선적 공급지원
-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제도도입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임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주택금융 및 주택관련 세제 개선

○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하기 위한 저당채권유동화제도 활성화

-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ABS),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REITs) 등

○ 국민주택기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다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선

-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담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호화주택 등은 중과세함으로써 주거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안검토

(5) 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 시장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추진

-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을 자산보유정도, 주거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 최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최저수준(civic minimum)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여러 형태의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차가가구의 2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저층을 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를 위한 설비를 갖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

- 노인, 장애인 대상 민간주택의 건설 및 개조에 대해 저리 융자 실시

○ 주거복지지표개발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국민주거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복지지표의 개발

• 거처지표(예: 밀도, 시설, 설비), 환경지표(예: 녹지공간비율 등), 문화지표(예: 문화공간의 유무 등) 등을 포함

- 지자체별로 최저기준, 유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지원절차와 방법 등을 지자체조례로 제정

- 지역, 계층,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주거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주거향상을 위한 법적장치 도입 추진

○ 종교·시민단체 등에 의한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에 대해 금융,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정부재정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주택수당제도 도입 검토

(6)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 관리

○ 공동주택관리 전문화

- 관리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관리비를 절감하고, 시설부위별·자재별로 내구연한·결함발생주기 등을 감안하여 하자부위와 보수책임기간 조정

○ 공동주택 관리대상 확대 및 개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의 의무적 관리대상을 주상복합건물, 3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까지 확대
- 공동주택의 대규모 수선비용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실시
- 택배, 간이우체국 운영, 팩스전송, 세탁 등의 관리 서비스 제공

○ 리모델링 산업의 육성·발전

-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 대수선, 개보수, 증개축 활동을 위한 자재 및 설비 산업 육성
- 개보수가 용이하기 위한 설비 및 시설의 표준화 추진

다.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1)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룬 개발관리

○ 재개발, 재건축시 주변 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및 시설확충계획을 고려한 적정개발밀도 설정 유도

- 도시외곽지역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시설정비계획수립

○ 경직적인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일방적인 완화 추세에서 탈피하여 상세계획 등을 활용한 유연한 성장관리체계로 전환

(2) 불량 주거지 및 생활환경 정비

○ 불량주거지를 비롯한 일반 문제 주거지 정비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환경기준」을 설정

- 지구단위로 구분하여 주거환경진단, 정비유형구분, 정비계획수립 등 계획체계 구비

- 현행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등을 일반적인 주거환경문제를 안고있는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가칭 「주거환경정비사업」 제도로 확대

○ 기초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확보수준을 설정하고 도시생활기반시설 정비

- 생활권 단위로 다목적 회관 설립과 주택단지내 근린도서관, 집회시설, 생활체육시설, 탁아시설, 어린이집 설치

○ 생활환경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 공원, 공영주차장, 녹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확충
-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조기집행노력 제고

○ 소음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정온한 도시기반을 구축

- 소음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소음취약지역에 대한 소음규제지역 지정
- 쾌적하고 조용한 도시시범마을 지정·운영 및 점진적 확대

(3) 공원녹지 확충 및 수변 공간 조성

○ 2020년까지 시가화구역의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

- 기존의 공원법 기준에 의한 공원유형 이외에 자연학습공원, 역사공원, 예술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원으로 확대하여 공원녹지체계 구성
- 도시공원확충을 위한 공원녹지총량제 도입 추진

○ 확보가능한 토지를 활용한 공원 녹지 확충

- 이전적지에 일정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토록 유도하고, 관공서 및 학교 등의 담장을 제거하여 휴게공간을 설치
- 소규모 필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등을 조성

○ 도시하천 주변의 수변공간을 정비하여 친수공간화

- 복개하천의 복원, 실개천의 조성 등의 친수환경 구축
- 도시하천을 시민휴식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조성

(4) 자연친화적 도시정비

○ 적정밀도계획, 바람통로계획 등 자연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생태통로(eco-bridge), 생물서식공간(biotope), 생태공원, 도시 환경림 등의 조성을 통한 도시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 태양, 바람 등 자연에너지 이용, 에너지회수시설 설치, 폐기물소각열 이용 등 도시의 에너지, 자원순환체계구성

○ 자연친화적 계획요소를 도시계획 수립항목에 포함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계획' 항목을 강화
- 공원녹지 및 자연친화적 계획 작성 지침 마련

(5) 녹색교통환경 정비

○ 환경오염 저감과 대중교통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 버스, 택시의 환승광장 및 자전거 보관소 등 자전거이용·정비시설 확충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도로 정비
- 버스노선의 조정, 전용차로의 확대와 버스우선 신호제의 추진
- 생활권 중심의 도심직주균형(Jobs-Housing Balance) 개발 및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중·고밀도의 주거개발 등을 통한 교통수요 최소화
- 도시전철확충 등을 통하여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환경오염 감소 도모

○ 교통사고 저감 및 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시설설계기준의 강화, 통학로 및 주택지 내부도로의 생활도로화
-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수보도시설의 개발
- 도심의 특정지역을 보행자 전용지구(pedestrian precinct)로 지정
- 고령자, 이동약자를 고려한 보행위주의 근린생활권 조성
- 지자체별 보행환경 업무전담부서 설치, 보행환경 조례,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행환경 조성

(6) 질서있는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 효율적인 대도시권 공간관리

- 도시내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개발, 도시구조 및 기능갱신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내부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

- 상업업무 밀집지, 간선교통망의 결절지 등을 부도심으로 재개발하여 다핵형 도시구조 구축

- 직주근접유도 및 역세권 복합기능화 등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대규모시설 이전적지를 중추관리기능, 문화예술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하여 시가지의 환경정비와 토지이용도 제고

○ 대도시근교 및 중소도시의 계획적 정비

-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용도와 농촌용도가 상호조화된 토지이용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정비

- 도시형 여가 및 레져시설의 유치로 쾌적한 전원환경을 조성하고 배후 농어촌지역과의 도농통합형 연계개발 추진

- 중소도시는 도시기능 특화로 자립적 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중저밀도의 재개발로 대도시와 차별화된 여유있는 업무 및 주거환경 창출

○ 국토계획차원에서 제시된 전략의 달성을 위한 선진형 복합신도시 개발

- 대도시에서의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시급히 대처하기 위해 신도시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대도시성장관리형)

- 산업지대조성의 배후도시 등 지원을 위한 경우(산업정책 실현형)

- 국제개방거점 구축수단으로서 신규개발이 필요한 경우(국제개방거점형)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수단으로 필요한 경우(남북한 교류협력형)

-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기능특화 신도시나 다기능 복합신도시

  • 건강·복지도시, 생애학습·문화도시, 자유시간도시, 상업·오락도시, 정보교류거점도시, 첨단기술집적도시 등

라. 도시복지시설 및 문화·관광인프라의 확충

(1) 도시경관, 문화, 역사공간 정비

○ 문화적 도시 이미지 창출로 개성있는 도시경관 구축

-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 창출, 자연적 경관요소에 대한 조망보전과 역사적 건축물주변의 정비 및 전통거리정비 등을 추진

-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작성

○ 도시생활권별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 접근성 제고와 다양한 계층의 수요충족을 위한 근린생활권 단위의 커뮤니티 복합문화시설 확충

○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 구축

- 박물관, 예술센터, 돔스타디움, 영상단지, 출판단지 등의 확충
- 도시별 문화지구지정 : 광장,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등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거점 정비

○ 도시장소마케팅의 활성화 및 도시의 CI(City Identity) 전략 수립

- 이벤트, 축제 등 문화행사 및 문화유산을 이용한 마케팅 추진

- 도시의 로고, 랜드마크, 명소, 추상적 특징 등을 부각시켜 도시의 CI전략을 수립·추진

-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도시 이미지의 홍보와 판촉을 강화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

○ 노인을 위한 주간휴식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주거형태개발

- 동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등을 활용하여 노인용 주간휴식시설로 이용

○ 장애인을 위한 주요 건축물 및 교통편의시설 공급과 생활환경 조성

- 주요건축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내부 개조시 건축비 융자, 무료설계 등의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 부여
- 옥외이동공간의 편의시설 및 이동수단의 편의시설 확충

○ 취업여성을 위한 아동 보육시설로 기존 사회복지회관, 학교, 종교시설 등을 이용한 만 2세 미만의 영아전담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프로그램 개발

3.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기반 구축

가.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도시계획,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등 주요 시설입지계획의 입안 및 수립단계에서 방재체계 및 수용능력 등을 종합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내실화

○ 하천제방, 주요시설물 등에 대한 설계기준의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방재 및 재해예측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반복재해발생지역은 방재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특별관리하고 방재시설투자에 중앙정부가 우선지원

○ 국토방재종합정보체제 구축, 재해전문인력 양성으로 방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도모

나. 태풍, 홍수, 지진, 한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 주요하천 및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치수사업의 지속적 추진

- 하천, 배수시설정비 등으로 저지대 범람지역의 상습피해방지

- 5대강 중심의 수계치수사업을 13대강으로 확대

• 임진강, 안성천, 삽교천 : '99년부터 공사착수
• 동진강, 만경강, 형산강 : 2000년 신규착수
• 탐진강, 태화강 : 2001년 신규착수

- 2007년까지 자연형하천공법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개수사업을 100% 완료하고,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하여 현재 20억톤의 홍수조절 기능을 2011년까지 34억톤 규모로 확장

【하천개수 현황('97)】

구 분	하 천 수	하천연장(㎞)	하 천 개 수		
			요개수연장(㎞)	개수연장(㎞)	개수율(%)
직할하천	62	2,858	2,851	2,698	94.6
지방하천	55	1,320	1,264	1,033	81.7
준용하천	3,847	26,238	31,998	19,030	59.5
계	3,964	30,416	36,113	22,761	63.0

- 수해취약 시가지 정비 및 군사시설의 재해안전대책 강화

○ 첨단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구축

- 하천수위, 댐방류, 제방범람 등 홍수관련상황을 종합관리하는 「홍수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홍수통제소시설 현대화
- 지대의 고저, 하천제방상태, 토지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예보지점 확대

○ 빌딩, 도로, 철도, 교량 등 건설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진감시 및 피해경감기술 개발

○ 연안지역의 적조, 기름유출사고 등 해상재해방지 및 신속처리체계 구축

○ 갈수기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 강화

- 단기적으로는 지하수 등의 비상관정 개발을 추진하여 당해연도 식수원 해소방안 구축
- 장기적으로는 갈수기에 대비한 지하댐을 개발하거나, 상대적으로 용수원이 풍부한 광역상수도와의 비상연락관 설치운영 등의 추진

다. 도시기반·교통시설의 설치 및 도시개발의 안전체계 구축

○ 전기, 가스,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각종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 추진
- 가스폭발 등 도시형 재해발생시 관계기관간 신속한 비상협조체계 구축

○ 교량, 터널, 고층건축물 등 대형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의 설계기준 제정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

- 특히 계기착륙, 공항관제 등 항공안전시설 개선

○ 수질오염 및 독극물사고 대책 강구

- 오염원 분석과 조기경보 및 처리시스템 개발·설치
- 광역상수도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대처 능력 향상

라.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안전·시설유지관리 강화

○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안전기준 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근로안전 위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부실공사 방지체계로 확대·강화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보수 및 유지관리 투자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체계 구축

- 시설물별 유지관리지침 작성 및 활용 추진
-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방법 및 기준설정, 유지관리기록의 정보화 추진

마. 범정부·범지자체 차원의 통합방재추진체계 구축

○ 부처간, 지자체간 긴밀한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합방재추진조직 구성

○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등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

○ 국토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각종 재난·재해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수습을 통해 인적·물적피해 최소화

-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안전관리를 전담할 지역안전관리센터 구축

-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재해의 전 단계와 관련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DB구축 추진

바. 남북한 공동의 치수대책 추진

○ 임진강 등 북한과 걸쳐있는 공동 수계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4.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가.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1) 유역권별 특성에 따른 수자원 개발

○ 4대강 대유역은 중규모댐 위주로 건설하고, 중소하천의 소유역은 소규모 댐 위주로 개발

- 자체유역이 부족한 지역은 저류용댐이나 양수댐 개발
- 수요 및 공급관리를 통한 절약 및 공급능력 제고

○ 한강권역의 장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댐 건설 및 기존시설의 공급능력 제고

- 2000년 초 예상되는 수도권지역의 용수부족해소를 위한 신규댐 건설추진

- 임진강 유역에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신규댐 개발을 신중히 추진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파주, 연천, 포천 등 수도권 북부의 용수공급 원활화 및 수도권의 제2용수원 확보

○ 낙동강권역의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신규댐 건설계획의 원활한 집행

- 경남 남동부(부산·창원·마산)의 신도시 개발 및 공단조성으로 인한 신규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규모댐을 연차적으로 건설

- 남강댐보강 및 밀양댐의 완공으로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의 원활화

○ 금강권역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댐을 추가 건설

- 단기적으로 용담댐의 완공으로 전주권 및 만경강 유역의 용수공급

- 중장기적으로 신규댐을 건설하여 대전권 및 청양, 홍성, 서산 등 삽교천 지역에 용수공급

○ 영산강 및 섬진강유역에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여 서해안벨트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

- 영산강유역은 단기적으로 탐진댐 개발에 의한 강진, 해남, 장흥 및 목포권 용수공급

- 중장기적으로는 광주 및 전남, 전북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댐의 단계적 건설로 신규 수자원 확보

(2) 광역상수도망의 확충

○ 전국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7%선으로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은 현재의 19%수준에서 85%수준으로 향상

- 광역상수도망이 통과하는 농어촌지역을 광역상수도 보급대상지역으로 확대 편입

○ 광역상수도는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 Ⅵ단계 등 광역상수도와 아산 Ⅱ단계 등의 공업용수도를 연차적으로 완공하고, 2020년까지 댐건설과 연계하여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 주요 수계를 광역상수도로 연결하여 지역별 수자원의 불균형 해소

- 지역간 용수수급의 불균형해소와 이상가뭄 및 수질사고에 대비한 광역상수도간 연계 운영

(3) 보조수자원 개발 및 낙후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확대

○ 해안 및 도서지역의 용수공급 원활화

- 해수의 담수화 설비의 보급과 간이상수도시설을 개발·공급
- 용수확보가 어려운 임해산업단지의 경우 해수의 담수화사업 추진 검토

○ 지하수 관리의 강화

- 지하수의 공개념 및 총량규제제도 도입으로 난개발 방지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개발이 어려운 해안 및 도서지역에는 비상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관정 등을 개발하여 갈수기에 대비
- 지하수 부존현황,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 지하관정에 대한 합리적 보존을 통하여 재생가능한 수자원으로 활용
- 갈수기에 취수한 관정에 용수가 풍부한 시기에 재충전하는 체계 구축

○ 간이상수도에 식수를 의존하는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상수원이 없는 산간 상습가뭄지역에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추진

- 농어촌의 노후 간이상수도를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4)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공동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방안 검토

-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에 대한 수문자료 교환, 인력·기술협력 및 공동 수자원 조사·실시 방안 강구

○ 통일 후 북한지역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용수공급과 수도권 지역의 용수공급방안 강구

나. 수자원의 적정 수질 확보

(1) 수질관리를 위한 특정 수계별 오염권역의 설정

○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폐수배출 밀집지역은 단기적으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장기적으로 폐수배출권의 도입을 통하여 점 및 비점오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

○ 물 관리 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10대강의 주요지점 및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 등급으로 개선

- 하수도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하수처리율 제고

○ 댐건설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병행

-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통한 댐 용수의 수질 보전
- 댐 건설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류지역의 토지이용방향 조정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댐 상류의 발생하수를 댐 하류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댐 건설계획에 포함

(2) 유역권별 차등적 폐수배출기준의 적용

○ 공장폐수 등에 대한 배출기준 차등적용으로 공장입지의 계획적 집단화

- 유역권별로 수질절대보전지역, 수질보전지역, 수질배출기준 완화대상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폐수관리의 효율성 도모

○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용도별, 하천구간별로 수질환경기준을 조정
- 지역수질환경기준은 관련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합의로 결정하고,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달성

(3) 수질 등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 개선

○ 기존 용수공급원의 수질상태 재점검을 통하여 수질등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의 합리적 개선

- 농업용수의 수원을 확대·보강하여 수질상태가 양호한 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병행공급하는 방안 검토

○ 상류의 맑은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공업용수는 강 하류에서 취수하는 방안 강구 등 수요처간 용수의 합리적 배분

○ 수질개선을 위한 강변여과수 활용

- 수질오염도가 Ⅱ~Ⅲ등급 이하인 지표수를 직접 취수하는 대신 강변 모래층과 같은 지역에 투과시킨 자연 여과수를 취수
- 대규모 취수지역이 아닌 소규모 취수 및 보조수자원으로 활용

다.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1)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절약

○ 물값 현실화 등 수자원의 절약적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생활용수 요금인상 및 요금 누진제도의 강화로 물 절약을 유도

-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용수가격이 비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등으로 용수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 가격인상에 의한 재원증가분을 절수기기 등의 도입에 보조금형태로 사용 또는 누수방지사업 등에 투자

- 전체용수수요 중 5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절약적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수리권거래제도 등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통한 용수절약 유도

○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대한 시설 스톡 및 용수이용에 대한 평가실시

- 지자체별 용수절약 성과에 따른 국고 보조금 차등지급
- 지자체별 장·단기 용수절감계획의 수립
- 수질오염 및 물 부족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국고 및 지방교부세 보조등으로 신규 생활용수개발지의 발굴

(2) 중수도 및 절수형 기기의 보급확대

○ 중수도 시설의 설치 확대

- 조세감면확대와 물값 인상을 통한 중수도 이용의 경제성 제고
-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절수형 수도기기의 설치 의무화 및 보급확대 추진

-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주택에서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주택으로 단계적 확대
- 구형 기기를 절수기기로 대체할 경우에 리베이트 시스템 도입

(3)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 기존 댐의 연계운영 등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제고 추진

- 기존 댐 등의 토사누적 실태파악을 통하여 토사의 준설가능성도 검토

○ 농업용 수리시설의 정비를 통한 농업용수의 이용효율성 제고

- 농업용 저수지의 준설을 통한 공급량 증대를 골재채취와 연계
- 농업용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송수손실 저감

○ 보강용수(저수지, 양수장 등)의 개발로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농어촌 용수의 원활한 공급 확대

(4)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

○ 내륙주운을 통한 수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물류수송의 원활화 방안 강구

- 주요 수계별로 친환경적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과 같은 관광자원의 개발

- 현재 추진중인 경인운하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강주운과 연계하여 이용효율 제고

- 주요 하천 하류지역의 수로개설을 통한 연안수송능력 제고 검토

○ 도시주변하천의 수변공원화

- 도시주변 녹지, 수로, 하천 등의 정비로 물과 녹지가 조화된 수변공간 조성
- 수변공원, 물놀이 관련 레크리에이션 기반조성으로 여가공간 확대
- 상류지역 등에서의 물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수질오염예방대책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수변공원이용에 따른 생활하수 및 쓰레기 유입 차단

라.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1) 효율적 물 관리기법 및 시스템의 개발

○ 대규모 수자원개발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최적의 용수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물 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 댐 군의 연계운영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운영
- 유역변경방식 및 수계별 종합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제고

○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특정지역 또는 권역의 지표수, 지하수, 댐 용수 그리고 이들 용수의 취수에서 배분에 이르기까지의 부존량, 이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구축

○ 노후 수도관의 개량 교체와 수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2010년까지 누수율을 8.5%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거 4만3천여km 교체

- 수도관리종합시스템(GIS이용) 구축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수도시설의 사고예방과 물 손실 방지 도모

○ 지방상수도 등에 민자유치추진

- 취수, 송수, 정수, 배수 등의 상수도 각 부분마다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경영의 효율성 도모

(2) 유역별 하천관리체계 강화

○ 유역별로 수자원개발·관리 및 홍수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

○ 용수수요 및 공급의 통합적 관리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신규 용수원 개발부담을 낮추며 공급, 저장, 처리시설의 사용연한을 동시에 제고

○ 유역권별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유역별 수자원 관리와 연계 운영

- 용수이용 평가 및 할당제 도입으로 공급지향형에서 수요관리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
- 도시 및 산업입지관련 개발계획과 연계한 수요관리시책 도입
- 물 관련법, 규제, 정책에 각 유역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최적의 다양한 관리방안 도출

○ 유역권별 물 사용 관련 지자체간의 협정을 통한 용수분쟁해결

- 수리권의 확립을 통한 지자체간 물 관련 분쟁을 사전차단

○ 수계관리계획 진척 상황의 지속적 감시 및 보고

- 계획 당시에 검토되지 않았던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반영
- 수계별 관리계획의 이행에 따른 관련 정보의 GIS 데이터베이스화로 변화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의 평가와 개선자료로 활용

○ 유역별로 수자원 전담을 위하여 하천관리청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각 유역의 특성에 맞게 수량·수질관리 등 하천을 종합관리

(3)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 원활한 수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시설 확대

- 주민참여에 의한 공공의 합의도출을 통하여 수자원 개발을 유도
- 신규 및 기 개발된 댐 등의 수자원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댐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의 조기 정착 유도

○ 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개발 및 종합법의 제정

- 물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정립
- 지표수, 지하수 등의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을 포함하여 모든 물의 확보, 관리, 보전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체계 확립
- 수량적 측면에서의 취수허가, 면허 등의 법적 규제와 수질측면에서의 오염배출기준, 범칙금제도 등의 유역별 차등적용을 위한 정책대안 강구
- 물 관련법, 규제, 정책에 유역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유역권별 관리제도 마련

제4장 고속 교통 · 정보망의 구축

1.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망 형성

가. 합리적 수송분담·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수송체계 구축

- 편의성 측면이 뛰어난 도로는 여객과 단거리 이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
- 장거리 이동에 효율적인 철도의 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률을 점차 제고
- 여객과 화물의 시간비용이 상승됨에 따라 항공의 수송분담률 제고
- 저비용 대량·장거리 수송이 용이한 해운의 화물 수송분담률 제고

○ 간선도로망의 완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점차 철도수송체계 강화

- 승용차 대중화와 문전(door-to-door) 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도로망 구축
- 고속철도건설 및 기존철도의 개량·신설을 통해 철도 수송분담율 제고
- 본격적인 철도망의 확충에 앞서 중장거리 고급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항공시설투자 확충

○ 국제공항과 항만의 위계화된 개발로 중추시설의 동북아 관문역할 부여

- 국제운송에 있어서는 여객은 항공, 화물은 해운의 기조 유지
- 세계를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 중단거리 국제여객수요를 주로 담당하는 권역거점공항의 위계화된 분담구조 형성
- 항만에 있어서도 부산·광양항을 중추 수출입항만으로 이용하고, 권역거점항만은 중단거리 교역화물을 담당하는 기능분담 추구

○ 수송수단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송효율성이 높은 시설투자 강화

-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거점시설 배후에 산업도로 및 산업철도 확충으로 배후수송망 형성
- 대도시권에 지역간 교통과의 연계교통망 형성

• 광역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광역종합교통망 구축
• 도시교통체계내에서도 화물수송 효율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 남북교류와 협력증진에 따라 적합한 단계별 수송분담체계 구축

- 남북교류의 규모와 형태에 필요한 교통체계를 순차적으로 개발

• 교류 초기단계에는 항만과 공항, 활성화 단계에서는 도로망 연결 추진

-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철도이용 증가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나.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접근할 수 있는 기간교통망 구축

(1) 도로부문

○ 개발방향

- 국토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9 고속간선망의 단계적 구축
-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 정비
- 통일에 대비한 교통망 형성과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 도모

○ 국토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괄한 종합간선도로망계획 수립

-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경제활동의 광역화 현상 수용 등 고려
- 계획을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추진

• 고속도로와 국도의 투자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종합검토하여 재원간·시설간 중복투자 배제

• 전국 네트워크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국도의 구분을 결정하되 간선국도 구간은 고규격화하여 미래의 고속통행 수요까지 대비

○ 국토간선도로망

-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발전도모

- 고속도로간 또는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규격 고속간선망으로 연결하며 대도시권 순환망을 간선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

- 고속도로는 '97년 현재 총연장 1,900㎞에서 2020년 약 6,000㎞로 확충

○ 일반도로망

- 국토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

•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 제고 : 25%('97) ⇒ 50% 이상(2020)
• 국도의 구간별, 단계별 건설사업은 하위 국도계획에서 구체화

- 도시우회도로 및 산업지원 국도를 중점 건설하고 기존시설의 개량 및 국도 안전성 향상

• 읍면급 이상 도시에 2,000㎞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현상 해소
•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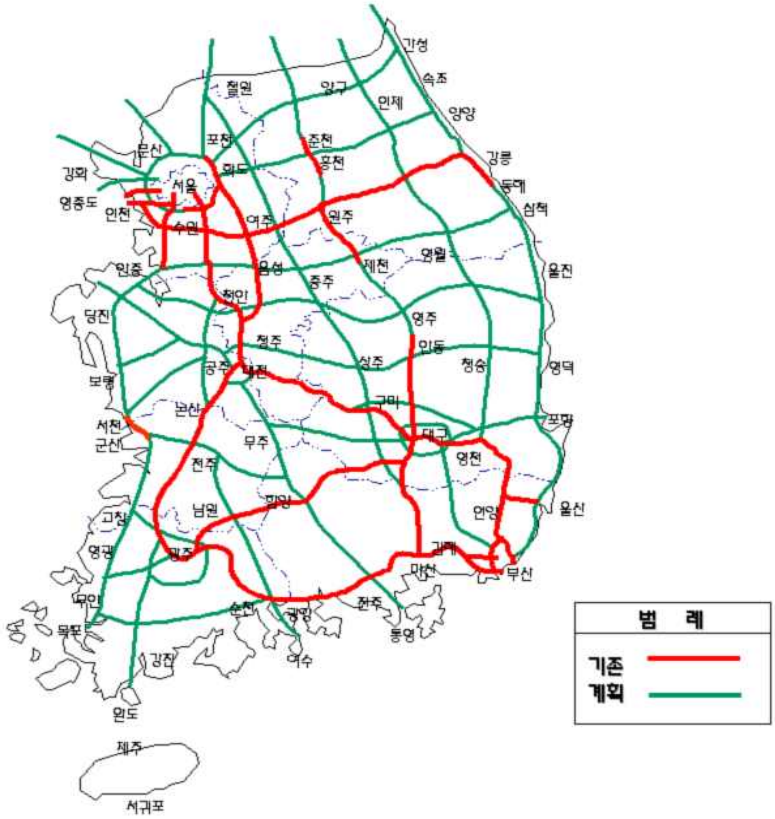
- 2020년까지는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연장을 '97년 현재 8만 7천㎞에서 약 20만㎞로 확충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북축	제1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제2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제3축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제4축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북의 영천-부산)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동서축	제1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제2축	인천-서울-홍천-양양(속초)
	제3축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제4축	안중-음성-제천-삼척
	제5축	당진-천안-영주-울진
	제6축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제7축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
	제8축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울산
	제9축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을 통해 간선기능 부여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2) 철도부문

○ 개발방향

-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운영
- 철도 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 점차 제고
- 계획기간 전반기에는 수요가 있는 기존선로의 직선화, 복(복)선화, 전철화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반기에는 철도망의 신설에 치중

○ 고속철도망

- 경부고속철도를 1단계로 2004년까지 서울~대구 신선 건설 및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로 개통하고 2010년까지는 전구간 신선 건설, 완공 후에는 기존 경부선을 화물위주로 운영
-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 기존 철도망을 복선전철화·개량하고 이를 고속철도의 지선으로 활용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철도망과의 연계운영 도모

○ 일반철도망

- 기간철도망 확충

- 경부선 정비 : 수원~천안 2복선전철화 및 천안~조치원~대전, 대구~부산 복선전철화를 경부고속철도의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조기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의 전철화 추진
- 호남선 정비 : 송정리~목포 복선화, 경부고속철도 연계수송망 구성차원에서 대전~목포간 전철화 추진
- 중앙선 정비 : 청량리~덕소~원주, 원주~제천, 제천~도담,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 단계적 추진
- 전라선 정비 : 광양항 배후 수송망인 신리(전주)~동순천 개량후 전라선 전체구간(익산~여수)의 복선전철화를 단계적 추진
- 장항선 확충 : 천안~군산간 복선전철화(장항~군산 신설)
- 서남선철도 추진 : 장항선, 전라선 전구간의 복선전철화 완료 이후 수도권 서부와 아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서부와 광양을 연결

-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 추진

- 기존선 정비 : 충북선(조치원~봉양)을 전철화하고, 태백선(제천~백산), 영동선(동해~백산~분천~영주), 경북선(영주~점촌~김천), 대구선(동대구~경주), 군산선(군산~익산) 등의 복선전철화 추진
- 경전선 확충 :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 보성~마산간 직·복선화, 마산~사상간 철도 건설 및 경부고속철도 연계수송망 구성차원에서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 추진
- 경춘선 확충 : 청량리~춘천간을 우선 복선전철화한 후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신설
- 동해선 확충 : 동해남부선(부산~포항) 복선전철화, 삼척~강릉간 복선전철화, 강릉~고성간 복선전철 건설, 포항~삼척간 철도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
- 중부내륙선 신설 : 성남~이천~충주~문경, 김천~진주 노선의 건설을 추진
- 동서철도망 확충 : 원주~강릉, 보령~조치원, 울진~분천 노선의 건설 추진

- 산업지원 철도망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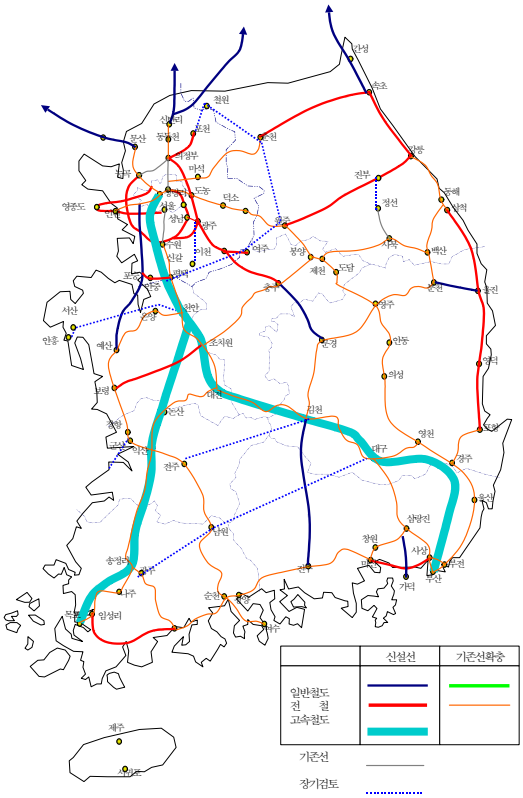
- 대불산업단지의 일로~신외항, 평택(아산)항의 포승~평택, 군장항의 대야·서천~군장산업단지, 광양항의 황길~부두, 부산신항의 가덕~삼랑진 연결
- 서남선 철도와 연계하여 아산만권 임해공단 등의 배후 산업철도망 건설

-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남북철도망 신설·연장

○ 철도영업연장 : 3,118㎞('97) ⇒ 약 5,000㎞(2020, 1.6배)

- 복선화율 : 28.9%('97) ⇒ 80%(2020, 2.8배)
- 전철화율 : 21.2%('97) ⇒ 82%(2020, 3.9배)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3) 항만부문

○ 개발방향

- 컨테이너 화물 비중의 증대, 선박의 대형·고속화, 복합운송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대형항만을 개발

- 2020년 연간 20억톤으로 예상되는 항만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 시설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항만은 기능개선 차원에서 시설정비 추진

○ 부산신항(24선석, 연간 460만TEU), 광양항(24선석, 연간 528만TEU)의 양항을 대형 컨테이너 중추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

- 2011년까지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총 68선석, 연간 1,423만TEU의 처리능력을 확보

- 광양항은 특히 광양제철과 여천·율촌산업단지 지원기능 수행

-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선사, 화주) 편의향상을 위해 동일항만권(united port)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

○ 신항만 건설과 기존항만 정비를 통하여 전국적인 항만체계 구축

- 권역 거점항만의 육성

• 인천, 평택(아산), 군장, 목포, 마산, 울산, 포항, 강원동해안에 국가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거점항만을 육성

•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건설

• 평택(아산)항, 군장항 지속적 건설 및 인천남외항, 대산항, 목포항, 마산항, 제주항 시설 확충

※ 강원도 동해안의 국제 신항만 건설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추진

- 지역항만의 확충 및 정비

• 보령항의 신설과 기존 항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시설 확충 및 정비

※ 새만금신항 건설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 항만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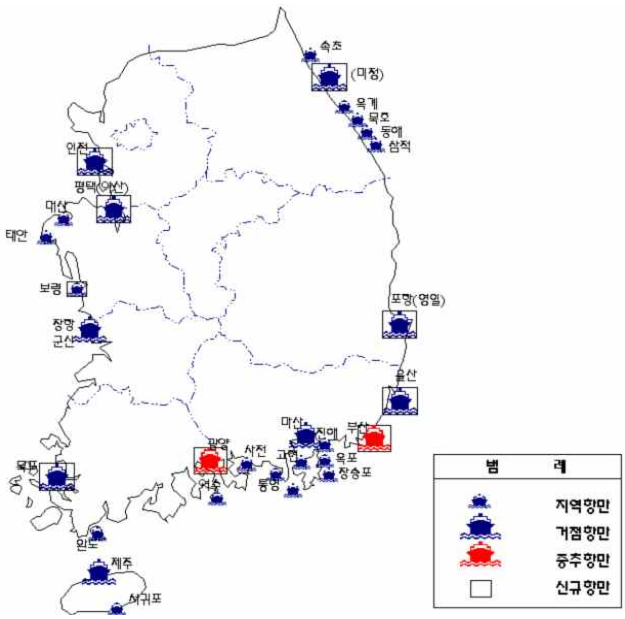
○ 항만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화 추진

- 수송망, 물류망,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 구축을 위해 항만과 배후지간 연계수송망 및 배후 종합물류기지 조성

- 항만 물류시설의 자동화와 다기능화, 부가가치 물류기능의 도입 등으로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의 효율적 처리

- 전국 28개 무역항 업무를 전산화하고 상역·관세망과 연결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전국 항만계획】



(4) 공항부문

○ 개발방향

- 국제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크게 증가할 고속·고급의 통행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의 여객 처리능력과 안전시설 확충

○ 인천국제공항을 2001년 상반기에 1단계로 개항하고, 2020년까지 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육성

- 1단계 공사에 활주로 2본과 여객·화물터미널, 배후지원단지, 서울연결 전용고속도로 건설
- 2단계 이후는 항공수요 및 재원조달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행
- 2020년까지 최종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53만회의 항공기 운항, 1억명의 여객과 7백만톤의 화물을 처리

○ 권역거점 공항의 조성

- 수도권은 김포공항의 시설개량후 국내선 위주로 운영
- 영동권은 외래관광객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양신공항 건설
- 중부권의 청주공항은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
- 호남권에는 무안 신공항을 건설

- 경북권은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계류장 및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 부산권의 김해공항은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확충
- 제주권의 제주공항은 국제관광객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터미널, 계류장 등 부족시설 대폭 확충

○ 지방(local) 공항의 확충

- 울산, 사천, 포항, 예천, 여수, 강릉공항 등을 수요에 따라 활주로, 터미널, 계류장 등을 확충하고, 전주 신공항을 건설

- 울진 등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항 건설 추진

○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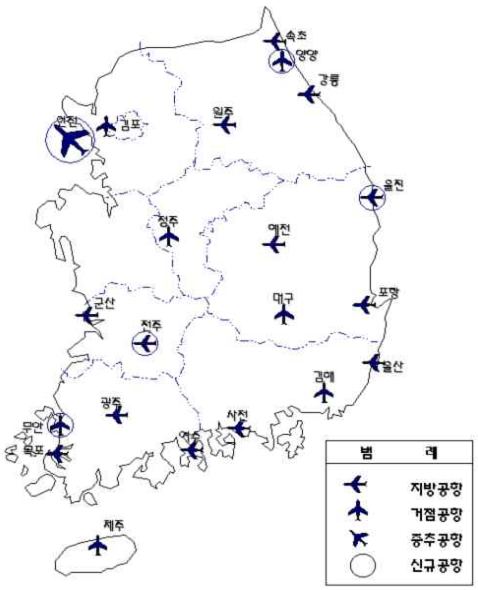
- 소형 비행기, 헬기를 이용한 중단거리 항공노선을 적극 개발
-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및 도서지역 통행과 해안관광 수요에 활용
- 근거리 항공 활성화를 위해 권역거점공항과 인접한 지방공항을 적극 활용
-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에 경비행장 또는 헬기 이착륙장 건설 추진

○ 공항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계기착륙시설·공항관제시설 확충 등 공항의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결항률 감소

- 군과 협의하여 공항이용 활성화 추진

【전국 공항계획】



(5) 물류부문

○ 개발방향

- 시설의 차별화 및 위계화(국가거점물류기지-내륙거점물류센터-지역중심유통단지)를 통한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물류정보화·표준화 추진으로 물류시설의 효율성 제고

○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과 유통단지를 연계하여 전국거점~지역거점~소비자에 이르는 네트워크 구축

- 대량화물의 거점에서 거점으로의 이동, 소량화물의 집배송을 통한 운송, 생산지와 수요지의 직접 연결 등 다양한 경로 제공

※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컨테이너 기지

○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 확충을 통한 국가기간물류거점 구축

- 수도권의 의왕 ICD와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산권의 양산 ICD와 복합화물터미널,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 물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국가기간물류거점으로 활용
- 호남권(장성), 중부권, 영남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내륙거점시설 확충
- 부산항, 광양항 및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물류단지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물류 등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처리 도모

○ 유통단지 개발을 통한 내륙~해안연계형 유통체계 구축

- 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 39개 거점에 전국 유통단지망 구축
- 1단계로 전국 28개 거점에 유통단지 개발
- 유통단지와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을 철도 등으로 연계하며 상호 보완·경쟁적 관계유지

○ 국제거점항만과 배후 국제거점공항을 연계하여 동북아의 환적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sea-air 복합수송체계 구축

- 인천항~인천국제공항, 부산항~김해공항의 연계운영 등으로 해운-항공의 복합수송수요 흡수

○ 물류수송분담을 위한 연안해운 및 하천하류의 주운 가능성 검토

○ 물류산업의 정보화, 첨단화의 추진

- 2015년까지 종합물류시스템 구축 : 육·해·공의 개별화물정보망과 통관, 무역 등 유관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전자문서교환, 시설 및 알선정보를 포함한 D/B 구축과 무선통신을 활용한 차량추적 및 원격관제를 구현할 화물운송정보시스템 구축
- 무인반송시스템, 지하수송망 등 새로운 물류 처리수단의 개발

○ GDP 대비 16.5% 수준인 물류비를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절감

다.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부응한 교통체계로의 개선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등 대도시 생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결한 광역도로망과 광역전철망 확충

○ 대도시권에 외곽 환상형 도로망 및 광역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 주요 축에는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지역간 교통의 도시통과억제를 위하여 도시외곽 환상형 도로망 구축
- 시경계 병목도로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지체구간의 조기 해소
- 도로표지 및 신호체계의 일관성 및 과학화로 도로의 소통능력 제고

○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 제고 및 연계기능 강화

- 급행열차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전철, 개인용 레일차량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수송분담체계 개선
- 수도권의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순환선 등의 광역철도망 확충

○ 환승수요에 대응하는 시설확충

- 자가용 이용자의 전철 환승비율 제고를 위해 환승주차장 건설
- 버스정류장을 전철역과 통합하여 종합환승센터 건설

○ 광역교통행정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의 건설·운영시 광역적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조정기능을 강화
-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광역적 교통대책 강화

2.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

○ 주변국가의 주요 공항과 연계성을 높여 미국, 유럽행 아시아지역 항공여객의 환승수요 확보

○ 항만, 정보통신, 물류, 레저기능을 갖춘 복합배후도시를 병행 개발

나.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활용

○ 항만시설의 지속적 확충, 국제항로(trunk line) 및 해운사와의 연계 강화로 동북아지역의 환적기능 흡수

○ 항만 배후지역을 개발하여 중추항만 지원기능 강화

다. 동북아 철도망의 일환으로 한반도 철도망 구상

○ 부산·목포~서울~신의주~중국, 서울~원산~청진~러시아로 연결되는 남북 2개축을 동북아 연결노선으로 설정하고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 횡단철도(TSR)·아시아횡단철도(TAR)등과 연결하여 동북아 간선철도망 형성

○ 동서연결 노선으로 남포~평양~원산~나진을 구상

라.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확충 추진

○ 국도 1호선(자유의 다리~판문점), 국도 7호선(고성~휴전선) 등 단절된 6개 국도를 우선적으로 복원

○ 7×9의 남북 7개축 중 서울~평양~신의주(중국), 서울~원산, 강릉~청진~선봉(러시아) 축을 우선 연결

○ 궁극적으로는 남북 7개축을 북한의 간선도로망과 연결하여,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연결 도모

마. 한반도 및 동북아 해운수송망 구축

○ 남포, 청진, 나진, 선봉 등 북한항만과 연계되는 한반도 연안수송망 구축 추진

- 서해안의 목포~군장~인천~해주~남포~신의주항
- 동해안의 부산~울산~포항~동해~원산~흥남~청진~나진·선봉항

※ 남해안의 목포~여수~광양~통영~마산~진해~부산항도 함께 추진

○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 나호드카항, 보스토니치항, 중국의 연운항, 대련항 등 주변국가 주요 항만과의 국제해운 수송망 구축

3. 인간존중·환경중시의 교통체계 구축

가. 국민생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인본주의적 교통체계의 구현

- 운전자의 안전운전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 마련
- 교통수단의 이용 및 설계기준 제정시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설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사후평가 실시

○ 철도, 해운, 항공관련 대형사고 가능성에 대처

- 철도 건널목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입체화 등 시설 정비
- 해운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특히 유조선)에 대비, 안전검사 및 신속한 환경오염 방재 시스템 구축
- 항공기 정비 철저 및 운항관제 개선과 공항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위험물 수송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 전용노선 또는 진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 위험물 운송요강 마련, 운전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 제고
- 상수원변 통과도로에 대한 도로계획·설계시 오염사고 방지 도모

○ 비상재난 구호체계 구축

- 도심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는 비상종합계획 수립
- 중소형 항공기·헬기를 이용한 환자 긴급수송체계 및 재난구조체계 구축
- 재난구호활동에 군용공항을 적극 활용하며 필요시 교통오지 및 낙도 등에 긴급구조용 헬기착륙장을 건설

○ 노령인구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 수립

- 노령 운전자를 위한 각종 교통정보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또는 육교,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편리성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보도 등 시설의 개발

나.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및 지원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건설시 대절토 또는 대성토를 통해 산복이나 산간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경관·식생을 고려하는 공법 활용

○ 교통수단에 의한 환경오염을 감소

-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환경오염방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철도의 수송분담률 제고 (※ 철도의 단위수송량당 에너지소모는 승용차의 1/18)

- 시내버스연료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순으로 점차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 제고

○ 중장기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교통부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대폭 강화를 추진

다. 교통수요관리의 강화

○ 단기적인 정책으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 강화

- 승용차의 보유는 허용하면서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 개발
- 주행세 도입,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가격정책을 도입
- 도심내 주차수요관리의 강화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광역전철, 급행전철, 광역버스 및 환승체계 구축 등 현대화된 고속대량 수송수단의 확충을 통하여 승용차 이용을 대체
- 버스전용차로의 지속적 확대와 버스우선신호제의 추진
- 대중교통수단의 도착·출발시간 등 교통정보제공으로 정시성과 신뢰성 제고

○ 단거리 통행을 대체할 수 있는 녹색교통의 시설 지원

- 도심 보행자 전용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등 확충

○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이 고려된 교통계획 추진

- 통행발생을 최소화하는 교통계획수립을 강구
- 네덜란드의 ABC 계획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방식 도입
  - 토지이용,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입지를 결정
  - 주거지·업무·상업·문화시설을 근접시켜 불필요한 교통수요 감축
  - 통행이 많은 곳은 대중교통을 우선 배정하고 승용차 접근 억제

4.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교통체계 확립

가. 교통기술의 개발과 지원

○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차량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 도로용량을 최대한 이용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를 구축
-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불법차량단속 등 교통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

○ 교통정보표준화 및 교통관련 기본도 제작을 통한 교통정보의 체계적 구축

- 정보의 작성, 입력, 처리를 위한 자료 분류코드와 전송형식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자료 교류 및 공유 원활화
- NGIS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수치지도를 토대로 교통관련 정보가 표현된 기본도 구축

○ 교통기술의 개발

- 고속철도 기술이전을 통해 최고 운행속도 350km/h급의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 및 관련 핵심기술 확보,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 고성능 레이다, 폐쇄회로를 이용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행선박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항만운영정보 제공
- 첨단위성항법 및 자동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급증하는 항공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안전성 향상

나.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화

○ 각종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조정계획 마련

- 수단별로 수립되고 있는 단기적인 개별시설계획을 통합하여 범정부적인 종합투자계획 수립
- 사업추진, 재원조달 등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 명확화

○ 효율적인 시설공급을 위한 투자방법 및 제도 개선

- 교통수요, 지역개발 효과 등을 포괄하는 합리적인 사업평가체계 마련
- 획일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기준 마련

- 공공사업 추진의 효율화, 적정 재원배분방안 강구, 예산제도의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상의 효율화 도모

○ 집중투자를 통한 사업추진상의 효율성 제고

- 국토균형발전, 통행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수단별 특성을 감안하여 집중투자방식으로 투자효율성 추구
- 수송효율성이 높은 시설투자대안을 설정

○ 추진실적 평가 및 사업관리 기능 강화

-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재원배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간선교통시설에 대한 사업효과를 극대화
- 사업의 사후적 평가를 시행하여 투자효율성을 중점 검토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개념의 지표 보완

○ 민간자본을 활용한 시설투자의 확대

-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율이 높고 투자효과가 단기간내에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교통시설유형별로 투자수익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민간기업간의 경쟁과 협상으로 적정수익성 결정
- 민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민간투자방식 제공 및 국제상관행에 부합되는 입찰·계약제도 정착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계약제도 도입

- 국가, 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재원분담 등을 정하는 투자계약방식 도입

다. 교통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 창의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민간참여방식 추진

- 건설은 정부에서, 운영관리·보수는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의 민영화 추진
- 지방분권화에 대응하고 지역수요변화에 대한 조정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권을 적극 위임

○ 교통시설별로 국내에 적합한 형태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교통산업 관련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

5.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형성

가.「광속의 통합국토」형성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1)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국토공간 전체를 포괄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첨단 지식사회의 균등한 정보향유권리를 보장

- 전국토의 정보통신망이 하나로 연결된 첨단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구축
- 2010년까지 기간전송망으로서 초고속국가망·초고속공중망을 조기에 구축
- 전화망, CATV 등 기존 통신망의 고도화, 고속화 추진
-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계획추진시 정보화 계획도 고려하여 추진

○ 통합적 국토발전 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망, 디지털전화망, 무선통신망 등 다양한 정보망 구축
- 초고속정보망은 수요집적지역부터 단계별로 광케이블망 구축
- 산간 벽지 및 도서지역은 디지털압축전송기술과 무선통신,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초고속통신서비스에 접근토록 지원

(2)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정보네트워크의 구축

○ 국가기간통신망과 함께 다양한 지역응용망을 구축하여 다층구조의 정보통신망 구축

- 광역도시권·지방 대도시간·중소도시간 정보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형성
- 도시기능 유형에 따른 도시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생산·유통여건 조성

○ 지자체별로 지역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보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보화와 함께 지역정보네트워크를 지역사회에 맞게 개발·활용하여 지역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

- 지방자치단체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계를 위해 표준화 및 통합 유도

나.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1)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확충

○ 지역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물리적 기반망, 응용서비스망, 정보시스템, 컨텐츠 개발 등을 추진

- 지방의 정보통신시설 확충기반으로서 지역구조에 적합한 지역물리망을 우선적으로 구축정비
- 지역의 산업·경제구조 등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지역내 응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발

○ 지역정보통신 확충을 촉진하는 기반시설 지원

- 물리기반망, 응용서비스망과 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심센터로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공급
- 행정,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지역사회 등 지역의 각 부문별 정보화 촉진을 위해 관련 지역정보통신산업과 연계 강화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 주체별로 지역정보화의 하부구조를 확충하고 정보통신의 활용을 촉진

- 개　　인 : 의료·복지·교육·문화·시민정보 등 정보화 수요를 창출, 지역정보화 운동을 통해 주민의 정보화를 촉진
- 민간기업 : 지역산학협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장비 및 재정 지원, 기업내의 정보화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의 공유를 유도
- 공공부문 : 정보교류촉진을 위한 행정정보기반 강화, 원격의료, 전자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확대

(2) 최첨단 도시정보인프라 구축

○ 전국적 도시체계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정보화 관련기능 분담

- 대도시는 정보생산, 유통 등 중추기능을 담당
- 지방중소도시는 생활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생활정보의 거점역할 수행

○ 대도시의 광역적 확산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광역도시권 개발

- 교외지역에 정보지식산업과 신규택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인 위성도시 개발

- 도시내와 도시외곽, 도심재개발지역 등 도시전역에 고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도시정보센터를 설치

○ 도시·지역개발과 관련된 정보인프라 시설기준 및 지원책을 제도화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정보기반시설 확충·정비, 지역정보센터와 네트워크 관련 시설입지 확보
- 신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시 광케이블과 위성통신시설 설치
- 도시정보시스템(UIS)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시설을 포함한 각종 도시시설물의 관리체계 정립

(3)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고도의 정보서비스 공급

○ 고도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의료, 노인의료 구급서비스 제공
○ 홈쇼핑, 홈뱅킹, 예약정보서비스 등 도시적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보급

다.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토정보의 구축 및 활용

(1) 국토센서스조사 추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토자원에 대한 정기적 국토센서스조사 실시로 국토정보DB 구축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자원, 환경 및 시설 등 국토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국토자원부문은 정기적인 정밀조사 실시

○ 국토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사회경제정보, 환경정보 등 국토자원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원, 전문인력, 시간소요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 시급성이 높고 행정수요가 많은 토지정보, 지하시설물정보, 환경·자원정보, 재해·안전관련정보 등 국토정보DB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

○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근간으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구축

- GIS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종합관리시스템, 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 등

○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적극적인 구축

- 현재 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지하시설물, 토양, 산림, 지질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 자원, 환경, 농림, 재해·재난 등 공공GIS활용체계 구축

(2) 국토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 공간계획, 토지이용계획, 경제계획 등 각종 공공계획 수립과 자원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민원행정업무 처리에 이용

○ 주요 시설물관리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국토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이용효율을 높여 SOC시설의 효율화 도모
- 도로·상하수도·전력·가스·통신 등 각종 도시시설물 DB 구축으로 경제적이며 환경, 방재측면을 고려한 시설물배치 및 관리가 가능
- 각종 센서와 인공위성, 통신망을 통하여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정확한 재해예측정보 제공과 함께 경계·피난경보시스템 가동

○ 산업입지정보와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 지방정부의 조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공장 및 기업의 최적입지선택이 가능

○ 지형도, 지적도, 도로망도, 토지이용현황도 등 각종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교통·생활편리성, 자연환경, 교육문화시설 접근성, 지가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주거입지선택 가능

○ 토양정보 등 국토공간정보와 기상정보, 농산물출하정보, 농산물작황정보, 어업정보 등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농림수산부문의 안정적인 생산, 마켓팅, 자원관리

제5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1.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

가.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

(1)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

○ 개발잠재력 활용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기준으로 구분관리

※ 예시 :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

- 보전지역 : 생태자원의 적극적 보호 추진
- 준보전지역 :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기능 배치
- 정비지역 : 기반시설확충과 남북교류협력지구 배치 등으로 지역발전기반 강화

○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우리측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 남북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태관광 등을 위한 동서간 평화관광로 개발
- 간선교통망 확충 및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2) 중장기적으로 한반도「평화벨트」조성 추진

○ 교류협력사업의 연계를 통해 평화벨트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부의 금강산관광으로 시작된 교류협력의 흐름을 중부내륙의 농업협력, 평화생태공원, 임진강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거쳐 서해상의 평화의 섬까지 연결하는 평화벨트 조성 구상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여 추진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제·문화·환경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 개발

-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할 협력사업에 대비하여 권역별 교류협력지구 개발
- 물류, 농업, 수자원, 자연생태계 보호 등의 협력사업 발굴

○ 기존 금강산관광사업을 설악산과 연계한 남북관광특구 조성 추진

- 국제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항만·공항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 수자원·해양자원 및 자연생태계의 남북 공동이용 및 관리

- 한강 및 임진강 유역 공동개발과 금강산댐 및 평화의 댐을 연계
- 비무장지대내(철원-평강)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같은 상징적 사업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환경보전의 교두보 마련

○ 남북 영농교류단지 건설

- 철원이북 북측 접경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공동으로 개발
- 남한측은 농산물종자 등 농기자재를 지원, 북한측은 재배과정을 관리

○ 서해안지역의 긴장완화상황과 연계하여 평화의 섬을 서해안시대의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관광의 새로운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

- 초기에는 남북공동어로 및 해양자원 관리, 대륙붕 석유공동조사·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

- 중장기적으로는 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단지 및 교역거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교역특구'로 개발

- 국제기구, 남북한 당국, 농어민단체 등으로 공동추진체 구성을 단계적 추진

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발굴·추진

(1) 임해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

○ 항만시설 등이 확보된 북한내 기존 공업지역 주변에서 경제특구형태로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 타진

- 임해산업단지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위해 남한의 생산설비 활용방안 강구

-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남북연계교통망 및 배후지의 인프라 확충

  • 단기적으로는 해상 수송망과 남한으로부터의 전력공급망을 확충
  •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에너지확보를 위해 발전시설 및 송유관시설 확충
  •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배후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물류기지를 확충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통신망 건설

- 1차적으로 금강산 등 관광지, 나진·선봉과 같은 경제특구지역에 추진
-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요도시 및 산업단지·관광지에 통신망 확충

○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로 전력공급체계 구축

- 단기적으로 남북간 송전선 연결을 통해 남한의 전력을 북한측에 공급함으로써 북한내 비료생산과 공장가동을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의 지원하에 북한의 주요 생산거점별로 화력 및 수력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2) 자원의 공동이용

○ 북한내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 남북간 자원협력 강화

-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광물들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함으로써 남북간 자원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

- 북한내 부존량이 풍부하고 남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개발(철광석, 금, 은, 동광, 마그네사이트)

- 동·서해안 대륙붕의 지하자원개발(석유, 천연가스)을 공동으로 추진

○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추진을 위한 남북 당국간에 공동협력기구 구성

- 자원매장현황, 부존자원의 개발상황 및 개발타당성 등을 공동조사

- 조사단계의 비용은 공공재원을 활용하고, 본격 개발단계에서는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 제3국의 자원개발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

- 남북한이 광물자원의 개발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경우 공동으로 러시아(시베리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자원개발에 진출

- 이를 위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 제3국 진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거친후 남북합작회사를 설립, 진출하는 방안 모색

(3) 환경협력 강화

○ 산림개선사업 추진

- 북한지역의 산림 병충해방제, 산림녹화사업 등을 우리측과 공동으로 추진

○ 백두대간 공동 환경관리 추진

-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을 민족적 환경자원으로 공동관리 추진
- 백두대간의 종합적 관리계획을 남북 당국과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

○ 수질 및 대기오염 개선사업 추진 등

- 북한내 공장·기업 등의 배출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지원방안 모색
-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북한지역의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투자기업 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추진

2. 남북 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가. 단절된 육상교통망의 단계적 복원 추진

○ 남북한간에 단절된 육상교통망(국도 6개 노선과 철도 4개 노선)의 단계적 복원 추진

○ 국도 6개 노선

- 1번 국도 : 목포～신의주 (자유의 다리～판문점)
- 3번 국도 : 남해～초 산 (신탄리～월정리)
- 5번 국도 : 마산～중간진 (화 천～평 강)
- 7번 국도 : 부산～온 성 (고 성～휴전선)
- 31번 국도 : 울산～신고산 (양 구～휴전선)
- 43번 국도 : 발안～고 성 (철 원～김 화)

○ 철도 4개 노선

- 경 의 선 (문 산～판문점)
- 경 원 선 (신탄리～휴전선)
- 금강산선 (철 원～휴전선)
- 동해북부선 (양 양～휴전선)

나. 북한내 주요 항만 및 공항시설을 확충

○ 서해와 동해안의 남북한 항구를 국적선이 정기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연안수송체계 구축

○ 주요 산업단지 및 관광개발 배후지에 거점 공항 건설을 추진

3.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류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상호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임해산업단지개발과 남북연결교통망 건설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연계 추진
- 기타 사업도 지역별, 시기별로 상호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도모
- 사업의 연계추진을 지원할 행정적 협조체계 구축

○ 각종 남북협력사업들이 주무부처의 통합과 조정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진전과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

○ 민간주도, 공공지원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 교류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되 민간주도가 어려운 일부 사업은 공공과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추진

- 공공은 민간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 기업 이외에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 농협, 수협, 각종 공사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종교단체와 사회시민운동단체 등 비정부 민간단체의 참여 지원

나.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

○ 북한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

- 투자재원마련 측면에서 남한기업이 외국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사업 추진
- 특히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국제금융기구나 민간펀드와 국내외기업이 공동으로 경제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제고

- UN산하단체 등 국제기구들의 중재기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

다. 남북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 교류협력기반의 다각화 측면에서 지자체간 교류협력 추진

- 교류협력의 다각화 측면에서 농촌 및 공업도시 등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지자체간의 자매결연 추진

○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 단기적으로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교환개최 및 인적 교류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호협력체계 강화

라. 남북한 공동의 통일국토구상 수립방안 모색

○ 동북아속의 한반도 구상, 남북한의 균형있는 장기발전구상을 남북한 전문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

제 4 편
시도별 발전방향

1. 서울 : 새천년의 세계도시

가. 기본목표

○ 세계도시로서 국제적 중추관리기능 강화
○ 새로운 천년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미래도시 구현
○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기반구축

나. 발전방향

(1) 국제적 중추관리기능의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

○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생산자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다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기업정보유통기지를 구축하고 인텔리전트 빌딩, 텔레포트 등을 건설하여 국제적인 정보중심도시로 육성

- 용산 등 새로운 부도심지역을 국제수준의 첨단업무단지로 조성

○ 국제교류산업의 활성화

- 세계도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다목적 컨벤션센터 건립 등 컨벤션 관련산업을 육성

- 컨벤션산업과 연계하여 국제쇼핑타운을 조성하고, 국제비지니스 기능을 확충하여 국제교류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관광수요를 창출

(2)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역할 강화와 미래도시의 구현

○ 공간구조개편을 통한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4개 생활권(동북, 동남, 서남, 서북)을 설정하여 각각의 부도심을 육성하고, 경기도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기능분산을 촉진

○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의 실현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생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준거로 삼음

- 월드컵 주경기장 일대를 새천년의 정보 및 생태도시, 통일시대의 관문도시로 조성

-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계획과 서울시 정보화 계획의 연계로 도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의 육성

- 세계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고도화된 첨단산업구조를 형성

- 준공업지역의 정비 및 노후 불량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첨단 및 벤처산업의 입지기반을 강화

(3) 지자체 중심의 수도권계획 수립 및 광역관리기구 신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 수도권의 대규모개발 등은 서울 및 인근 행정구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수도권내의 지자체 행정구역 차원이 아닌 수도권 광역차원에서 토지이용, 산업, 교통, 환경, 정보 등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광역도시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수도권 광역관리기구 신설

- 수도권 광역관리기구 신설로 광역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
- 광역관리기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의 이양

(4) 역사문화자원에 기반한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산업의 육성

○ 문화도시의 조성 및 관광활성화

- 4대문안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종묘제례, 과거시험 등 전통문화행사 재현, 전통문화재 보전·복원을 통하여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며 관광자원화

- 인사동, 남산, 한강, 여의도, 삼성동, 이태원 등 전통문화, 도시여가, 국제회의, 국제교류의 거점을 지역특성에 맞게 관광자원으로 개발

(5) 생활환경의 수준향상을 통한 생태도시의 조성

○ 한강 제모습찾기 사업의 추진

- 한강을 매력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가꾸어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며, 한강 시민공원 이용을 활성화하여 한강의 관광자원화 및 재탄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

○ 푸른 녹색서울 가꾸기

- 북한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녹지축과 한강 수경축을 복원하고 주요산의 경관을 회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살림

- 도심 이전적지, 수변공간 등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네트워크로 연결

○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여 고밀도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

- 한강 지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처리효과를 극대화하며, 자정능력을 갖춘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 자연생태계를 복원

- 난지도 매립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6) 원활한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 다핵구조를 지원하는 교통시스템의 구축

- 장래 서울대도시권의 공간구조에 부합하는 도시고속도로망, 순환고속도로망, 간선철도망 등을 확충

- 지하철망을 확충하고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추진

○ 교통운영체계의 확립 및 물류시설의 확충

- 과학적인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첨단화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 서울 및 서울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주요 교통축 및 생활권별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건설

- 물류간선도로 등을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

2. 부산 : 환태평양권 국제 해양 · 물류도시

가. 기본목표

○ 해양·물류산업수도와 국제금융거점의 기반확립
○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권의 중추관리기능 제고
○ 관광자원 활용과 국제적 문화·관광거점으로 육성
○ 뉴밀레니엄 시대에 대비한 첨단정보·영상산업의 활성화

나. 발전방향

(1) 항만 및 국제금융 기능제고를 통한 해양·물류산업수도 기반확립

○ 부산신항만·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기반시설 건설

- 21세기 국제교류를 선도할 환태평양의 관문으로서 신항만·고속철도의 건설로 대륙진출기지를 구축

○ 국제무역·금융 거점화

- 부산신항만의 동북아 거점항만 기능강화와 신항만 주변지대에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한 해양도시를 구현

- 국제적 정보·무역·물류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대금결제, 추심 등 국제금융수요에 부응하는 동북아 금융센터기능을 제고

○ 동북아 수산유통거점의 확보

- 수산물 양식 및 처리가공의 일괄시스템을 갖춘 종합유통단지 조성 등 국제적인 수산유통의 거점화 추진

(2) 국제교류거점을 향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도시공간구조개편과 권역별 특화개발

- 중부산권의 무역·금융기능, 서부산권의 생산·물류기능, 동부산권의 정보·관광기능 거점화를 통한 개발효과를 극대화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수계의 수질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역권의 광역상수도 확충, 낙동강 수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 추진

- 천혜의 남해안, 동해안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적 연안역 개발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광역교통체계의 기반확충

- 통일대륙축 및 국가 기간교통망과 연계된 부산권 순환교통망구축으로 동·남해안 산업 및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기반을 확충

- 부산, 울산, 경남을 연계하는 광역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망을 구축

- 물류수송의 체계개선 및 반일생활권을 위한 도시순환철도망을 건설

(3)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권의 중추관리기능 제고

○ 부산권의 중추관리거점 기능 수행

- 국제경쟁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본사이전 등 수도권 중추관리기능 분담으로 지역경제권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

-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구조를 고도화

○ 지식기반형 전략산업의 집중육성

- 성장유망산업(항만물류,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영화산업)과 구조고도화산업(자동차·부품, 신발, 조선·기자재, 섬유·패션, 수산·가공업)을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산업화

- 전략산업의 일본 큐우슈권과의 산업협력 및 분업체제를 추진

- 부산신항만, 김해국제공항 주변지대에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물류중심의 신산업단지조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

- 동부산권의 정관, 고리, 기장에 원자력연구 메카를 조성하고 신소재산업·부품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화

- 서부산권에 21세기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화를 위해 국제업무단지, 국제종합전시장, 컨벤션센터, 외국인 투자촉진지역 등을 조성

(4)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국제적인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 남해안 및 동해안 관광벨트의 거점관광지 조성

- 동부산권의 아시안게임 골프장과 연계한 복합관광단지, 해양리조트형 휴양타운 조성, 해양스포츠 활성화 등 친환경적 국제관광기능기반을 구축
- 서부산권의 경마장, 신항만, 국제공항, 물류단지, 지사과학단지, 국가공단 등과 연계한 해양생태공원, 전시관 등 산업형 연계관광지기능을 활성화
- 중부산권에는 바다와 조화되는 관람 및 해양휴양타운의 거점을 육성

○ 한일해협의 연안관광루트 구축 및 국내외 해상크루즈 개발

- 한일해협 연안관광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도, 후쿠오카, 나가사키)을 연결하는 공동관광루트 개발 등 공동관광사업을 추진
- 국제해상유람선(부산-후쿠오카-제주-방콕-홍콩-상하이) 및 항내·근해 해상유람선의 해상크루즈 개발, 국제무역항의 이점을 활용한 카지노시설 활성화

○ 지역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등 참여형 문화행사를 국제행사로 계승발전함
- 가야문화복원을 위한 민속촌 건립과 을숙도 자연생태계의 최대한 보전
-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개최를 계기로 이벤트행사를 지역문화발전의 전기로 활용

(5) 뉴밀레니엄 시대에 대비한 첨단정보·영상산업의 활성화

○ 정보, 소프트산업의 육성

- 정보서비스 산업단지, 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을 통한 정보·소프트산업 지원
- 부산정보단지와 연계한 광역종합정보통신망,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데이터뱅크 설치 등을 통한 첨단정보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

○ 영상산업의 활성화 유도

- 첨단 영상제작, 방송산업 등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상문화축제를 활성화
- 영상산업의 유치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영화테마파크, 복합상영관, 영화제작소 등과 같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3. 대구 : 국제 섬유패션산업 메카

가. 기본목표

○ 패션·섬유 등 지역특화된 전략산업의 육성
○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교통체계 정비에 의한 물류산업도시 육성
○ 특성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발
○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의 창출

나. 발전방향

(1) 지역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으로 산업거점도시의 기능 제고

○ 섬유 · 패션 산업의 수도화 : 밀라노 프로젝트의 추진

- 패션 어패럴밸리(패션문화거리, 패션쇼핑단지, 컨벤션마트, 이벤트광장 등)를 조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
-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 섬유산업의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여 국제적 섬유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
- 섬유패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섬유 메카로서의 대구 발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

○ 21세기형 첨단산업의 기반 구축

- 대구 ·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고 첨단연구·기술지원기반 구축

※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산업 등 21세기 성장주도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시내공단 이전수요 대처를 위해 추진중인 위천국가산업단지는 정부 정책 결정후 추진을 검토

○ 도시정보화의 추진

- 정보통신산업 육성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대구 · 경북지역 정보통신산업 거점 및 지역정보기반 구축의 중심지로 개발
-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종합정보체계를 구축

○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 벤처기업 등의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기반 구축

- 지역중소기업의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화·도시형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능인력의 역내공급체계를 구축

- 대구테크노파크 사업과 연계한 벤쳐타운 등을 개발

(2) 선진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도시공간구조의 미래지향적 개편

○ 선진도시로의 도시기능 강화

- 새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기존 공단 이전적지를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하여 국제교류증진 및 세계화 기반을 조성

○ 도심 부적격 시설을 이전하여 재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정비를 추진

○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형 도시공간구조 형성

- 고속철도역사와 연계하여 도심을 정비하고 달서, 안심, 칠곡, 현풍 부도심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기능을 부여

- 달성지역에는 자족적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부도심으로 육성

(3)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정비와 물류산업도시 육성

○ 다원적 교통체계의 구축

- 지하철 건설 및 연장을 추진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

- 대구선 복선전철화 등 광역철도망을 정비 확충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도시간선도로망을 구축

- 경부·구마·88·중앙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구미~현풍, 대구~무주, 대구~대동,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및 구지~청도간 국도확장 등 광역도로망 체계를 정비

○ 종합물류거점 기반 구축

- 영남권 복합터미널 계획확정후 기능 및 규모를 정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패션어패럴밸리, 대구서부화물역 등과 연계하여 물류도시로 육성

(4) 특성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여 문화관광도시 육성

○ 전통문화·자연자원의 관광산업화

- 팔공산 주위의 불교문화, 불로동의 고분군, 왕건유적, 공산호수, 단산지 등과 패션어패럴밸리, 문화정보 콘텐츠단지 등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 비슬산 주위의 서원 등을 연계한 유교문화 유적을 개발하고 임진왜란 당시 귀화한 김충선 장군 후손 집성촌에 한·일 우호촌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 동서의학협력 보건의료복지 단지를 조성하여 동서의학 협력의료사업을 활성화하고 전승약령시 문화를 국제 한의학 엑스포로 계승발전

○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및 첨단문화산업의 육성

- 낙동리버파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대구박물관을 자연사박물관 또는 민족사, 과학사 박물관으로 특화
- 문화정보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공해 없는 첨단문화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 구축

(5)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의 창출

○ 쾌적한 녹색도시공간의 건설

-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도시를 추진하고 낙동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수변산책 및 자연탐방 등으로 활용
- 낙동강 ·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 및 상수도 공급시설 확장

○ 시민 여가·스포츠 활동의 지원

- 대구대공원과 달성지역의 공원·유원지의 개발로 문화, 스포츠, 시민 정서생활을 지원
- 낙동강 및 금호강변에 낙동리버파크, 낙동생태공원과 연계한 수상 레포츠 및 휴양공간 조성

○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

- 금호강, 낙동강의 상습침수지역 해소, 하천예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전기, 가스,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건설재해 등의 방재대책 강화

4. 인천 : 동북아권 국제정보 · 교류 도시

가. 기본목표

○ 국제정보·교역도시 조성을 위한 트라이포트 기능의 강화
○ 아·태지역내 중추적 해양관광도시의 건설
○ 첨단산업 유치에 의한 선진 도시기능의 강화
○ 서해안개발축의 지역간 교통망 및 물류시설의 확충
○ 환경친화도시의 건설로 삶의 질 향상

나. 발전방향

(1) 국제정보 및 교역도시 조성을 위한 트라이포트 기능의 확충

○ 국제적 공항·항만·정보기능의 강화

- 국제공항(Airport), 국제항만(Seaport), 정보단지(Teleport)를 신설 및 확장하여 트라이포트 인프라시스템을 구축

- 국제교역 증대에 따라 금융, 무역, 업무, 관광기능을 강화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

-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영종도 일원에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며 공항, 항만, 통신기능을 결합하는 첨단복합기능을 수용

○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환황해권의 중심항만 건설

- 신항만을 개발하고 기존항을 정비하여 연안화물, 수출입 화물 및 컨테이너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복합항만기능을 강화

- 내항, 연안항, 남항, 북항 등 항구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종합 물류·정보 거점공간을 조성

○ 종합정보 네트워크 및 도시관리체계 구축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한 지역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 송도신도시에 국제적인 텔레포트를 건설하고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영상기기 등 첨단 정보·통신 관련산업과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산업 유치

(2) 특성있는 관광개발로 아·태지역 중추적 해양관광도시 건설

○ 인천 도심의 수변위락관광기능 강화

- 기존관광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위락시설과 테마공원을 개발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며 복합적인 도시·해양관광 개발을 추진

○ 용유·무의지구의 해양관광휴양지 조성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항남측의 용유·무의도에 국제위락 및 해양관광시설을 조성

○ 강화군내 역사, 문화, 전적유적 등의 관광자원화

- 역사, 문화, 전적유적 등 관광자원의 보전 및 재현을 통해 관광지를 조성하고 교육적, 체험적 관광상품을 개발

- 역사관광, 해변자연관광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순환형 자연휴양관광지 개발

-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하는 국제관광자유특구형 고품격 문화도시를 개발

○ 옹진도서지역의 해양 및 생태관광지 조성

- 관광어촌 및 해양, 도서휴양지구 등 기능이 연계된 4계절 도서휴양지를 조성하여 국제적 해양관광지로 육성

- 도서지역의 천연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생태관광지를 조성

- 다양한 해상유람루트를 개발하고 해상유람선, 관광전용 셔틀버스 등의 접근수단 및 정보를 제공하여 도서관광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도모

(3) 선진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 공업의 재배치를 통한 첨단산업기지의 건설

- 도심부의 공장들을 단계적으로 이전재배치하고, 공장이전적지는 중심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여 취약한 3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송도신도시 및 영종도에는 국제공항, 항만 등 입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관련 첨단산업을 유치

(4) 지역간 교통망 및 물류시설의 확충

○ 지역간 및 지역내 교통난 완화를 위한 육상교통망의 확충

- 교통난 완화 및 수도권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을 위하여 신공항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순환도로망 확충

- 경인전철을 복복선화하고 제2경인전철 및 수인전철 등을 건설하는 등 광역전철망을 구축

○ 교통 수요관리시책의 확대와 이용체계 개선

-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체증을 해소

○ 첨단 물류시설의 확충

-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국제공항과 인근 화물터미널, 항만시설 등의 지역간 물류 초고속정보망을 확충

- 산업용품 종합유통센타 및 농수산물종합유통단지 등을 적극 개발

(5)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의 건설

○ 산림 및 연안갯벌 등 자연생태계 보전

- 녹지관리체계 확립, 푸른 숲 건강한 산 가꾸기, 양묘사업 추진
- 도심속 쉼터조성, 쾌적한 생활주변환경 조성, 해안 친수공간 확보

○ 대기질의 보전 노력 지속 추진

- 환경오염 자동감시센터의 운영 활성화, 대중교통수단위주의 교통체계로 전환, 매연처리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공해배출기준 강화 등

○ 하수처리시설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생활용수와 공장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차단

- 2020년까지 총 1,925천톤/일 하수처리계획

○ 이전적지 및 영종, 용유, 검단, 송도신도시 등 신개발지와 전략지구내 도시공원 적극 확보

- 2020년 공원조성율 72.6%, 1인당 공원면적 14.5㎡/인 달성 추진

5. 광주 : 첨단산업 · 문화예술 중심도시

가. 기본목표

○ 광산업이 특화된 첨단과학도시로 발전
○ 남도 고유의 문화, 예술, 관광자원 특화
○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대중국 교류의 내륙지원기능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녹색환경도시 기반구축

나. 발전방향

(1) 첨단광산업 및 중추관리기능의 강화

○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구조로 전환

- 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입지매력을 제고

- 광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을 조성하여 광소자, 레이져, 광통신 등 첨단산업을 활성화

○ 서남권 중추관리기능의 강화

- 텔레포트, 정보화단지, 컨벤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보관련 중추관리기능을 강화

- 정보통신산업의 핵심기술, 연구, 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정보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

○ 서남권 거점 도시로서의 내륙지원기능 강화

- 국토공간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입지적, 기능적 여건을 갖춘 3대 내륙거점도시(광주-대구-대전)를 연결하여 대 중국 교류 및 동북아수출 배후 전진기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륙지원기능 강화

- 내륙 대도시(광주-대구-대전)를 연계한 내륙도시권의 광역적 발전 도모

(2)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창조역량 제고 및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 문화예술기반의 확충

-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벤처문화산업의 창업을 유도
- 시·서·화·창 등 유무형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예향의 도시 이미지와 결합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특화

○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 도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중외문화벨트를 예술공원으로 조성
- 금남로, 무등산, 광주호 주변 등 상징적 역사·문화공간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역문화축제를 상품화
- 천혜의 서남해안 관광지원기지 구축으로 서남해안 관광중심도시로 육성

○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컨벤션도시로 육성

- 지역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세계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아시안 평화단지를 조성

(3)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도심공간 정비

○ 기존 도심공간 활용의 극대화와 균형적인 도시공간체계의 형성

-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철도를 도심외곽으로 이설하며, 폐선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 전통발전축과 미래비전축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발전

- 기존 도심은 고유성을 유지한 생활업무공간으로 정비하여 전통발전축으로 기능하도록 함
- 미래비전축은 광역교통 등 광역도시서비스 수급공간으로 활용하며, 정보통신망을 구비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개발
-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등 도시생활, 행정, 산업정보 등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추진

(4)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서남권의 교통결절기능의 강화

○ 광역교통 결절기능의 강화

- 광주-망운간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건설, 광주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결, 광주외곽순환도로의 건설, 호남고속철도의 경유, 호남선 광주-목포 구간의 전철화, 경전선의 직·복선화 등을 통해 서남권 광역교통결절기능을 강화

- 고속철도, 철도, 도시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국토 서남권 육상교통의 종합환승센터 건설

- 기존도심, 순환도로와 방사도로의 교차점, 영산강변 등에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 이용체계를 구축

○ 서남권 물류중심기능의 강화

- 화물유통의 거점기능을 확보하고, 주변지역 농·수·축산물의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화물유통단지를 건설

(5)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녹색환경도시 기반 구축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

-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무등산 및 도시내 구릉지를 보전하고 도시내부에 녹색회랑을 구축하며, 도시중앙공원 등 공원을 확충

-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복호, 주암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고,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계를 보전

○ 자원절약형 도시체계의 구축

- 중수도 보급,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등 물의 순환체계를 강화
-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녹색교통도시의 기반을 확충

6. 대전 : 과학기술중추도시

가. 기본목표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지식정보도시 기반조성
○ 균형적인 도시구조 형성을 통한 선진도시 기반조성
○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물류·유통중심도시 실현
○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격조 높은 문화도시 실현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실현

나. 발전방향

(1) 첨단과학 및 지식정보산업의 특화도시로 광역적 연계발전 도모

○ 산업구조의 첨단화, 고도화, 유연화를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의 고도화 및 이와 연계한 테크노파크의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신기술개발 및 신산업혁신의 거점기능을 담당

-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 및 풍부한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시너지 파급효과를 창출

- 유연적 생산체계하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전문화 및 복합화를 추진

○ 첨단산업 및 지식·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망의 정비로 교외 입지가 가능한 정보통신산업 등 무공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

-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의 입지기반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식·정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2) 미래지향적인 도시구조의 개편과 균형적 도시발전의 유도

○ 도시구조를 단핵집중에서 다핵분산형으로 전환

- 기존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신시가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

- 기존 시가지에 주거, 생산, 상업, 업무기능 등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둔산신시가지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

-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기능 확충을 위해 서남권 신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산업, 문화, 물류기반을 구축

- 대도시적 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내부 간선교통축의 구축 및 도시관통 철도망 정비 추진

○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신업무기능 강화

- 고속철도 대전역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공공, 상업, 업무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서 기존도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 21세기에 지향하는 과학기술도시, 정보화도시, 국제적 업무도시에 상응한 권역별 도시업무공간의 확충 및 관련 인프라 구축

(3)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편리한 교통과 물류유통 중심도시로 발전

○ 서해안시대의 배후도시로서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 효율적인 대도시권 공간구조 구축, 청주공항과 연계강화 및 서해안시대 배후거점도시로서의 기능강화에 따른 지역간 교통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전~논산~서천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 중부권 도시간 연계강화, 청주공항 활성화, 오송·오창 산업단지와의 연계강화 등 대전·청주광역권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청주공항간 고속교통체계 구축 및 기존 교통망 정비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유통의 거점지 육성

- 권역별로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효율적인 물류유통시설의 공급확대

- 현대적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 및 국제적 이미지 제고

○ 국제컨벤션기능의 강화

- 엑스포 및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WTA) 주최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도시역량의 강화에 주력

- 국제컨벤션타운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및 정보교류, 휴양관광기능 등을 연계시켜 복합적 도시발전을 도모

○ 문화관광시설의 확충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문화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광역적 차원의 문화예술공간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

- 유성온천 및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관광벨트로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관광 신교통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 대전·청주광역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광역 스포츠·레저시설 확충

(5)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로 인간과 환경의 공생 도모

○ 자연친화형 도시환경의 조성

-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형 친수공간 및 자연생태계의 유지·복원사업을 추진하며, 고급 과학기술두뇌 및 전문행정가의 도시 정주의사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모델 도시로 육성

○ 연구개발 성과와 환경보전과의 연계강화

-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관련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범생태주거단지를 조성

7. 울산 : 자동차 및 21세기 신산업 도시

가. 기본목표

○ 자동차산업도시 건설과 21세기 신산업의 활성화 유도
○ 복합기능도시구조의 형성과 도농지역간 균형발전
○ 광역교통체계 확립과 국제무역도시 기반확충
○ 산악·해안자원의 연계와 관광·문화거점 육성

나. 발전방향

(1)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산업수도 건설과 21세기 신산업의 유치

○ 자동차산업수도의 건설

- 자동차도시의 특성을 살려 국내 최대의 자동차특화단지인 울산~경주 오토벨리(Auto valley)로 개발
- 자동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개발을 추진
- 자동차 및 첨단부품개발을 위한 자동차기술연구시설과 자동차부품 판매와 전시가 가능한 종합적 자동차관련시설을 조성
-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 서북부지방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자동차 분업체제를 구축

○ 21세기 신산업의 유치

- 석유화학공업으로부터 정밀화학분야의 육성과 자동차 경량소재, 반도체용 리드프레임소재 등 신소재산업의 고도화를 추구
- 업종별 전문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비롯한 21세기형 첨단유망산업을 집중 육성
- 외국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여 산업구조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울산공업단지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육성

○ 국토동남권의 테크노 시티로 발전 유도

- 주력산업의 산업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 및 공업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대학인근지역에 기술혁신센터 운영

(2)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는 도시공간구조로 개편

○ 단순공업도시구조로부터 복합기능도시구조로의 전환

- 도심의 중심업무, 방어진·강동·서생 등 남동해안권의 해양관광, 두동·두서권의 대학 및 전원도시, 언양권의 휴양관광, 웅촌권의 전원주거, 온양·온산권의 공단배후도시 등으로 기능을 특화

- 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대형장치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의 중소기업을 유치

○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울주군 일원의 농촌지역에 광역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도농복합 광역도시를 조성

- 저밀도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선진도시 수준의 시민휴식 및 레저활동공간 확충

○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중심기능 강화

- 지역내 기업의 본사유치와 금융, 보험, 무역, 정보통신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3차산업의 활성화 유도

- 고등교육기관, 문화시설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지역중심도시로의 위상 확보

- 특히,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신소재 등을 특성화한 경쟁력있는 지역대학을 적극 육성

(3) 21세기를 대비한 광역교통체계의 확립

○ 동서간고속도로와 연계

- 울산~경주~영천~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확장하여 군산·전주~대구~포항간의 남부내륙축과 연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구축

- 환동해안권의 관광지 개발과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동해남부선(부산~울산~경주)을 복선전철화하고 장기적으로 신설될 동해북부선과 연결

- 통일에 대비하여 부산~울산~포항~삼척~간성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고속도로의 신설

○ 공항시설의 확충

- 자동차 산업수도 울산과 국제적 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울산공항을 확충

(4) 국제 물류수송라인을 활용한 무역도시 기반확충

○ 항만물류기능의 거점기능 강화

- 전국 항만물동량 제1위를 기록하고있는 울산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남해안공업벨트의 중심항 역할을 담당할 울산 신항만 건설

- 남북한 및 동북아시아국가를 비롯하여 세계와의 교역이 활발해 질 경우 해외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물류기반시설 확충

(5) 경주의 역사문화권과 연계한 산업관광 및 문화 육성

○ 산업관광과 역사관광의 연계개발

- 울산의 산업관광자원과 경주의 역사문화유적지,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결합하여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종합관광벨트로 개발추진

○ 해안 및 산악연계 관광지 개발

- 강동일대를 세계적 수준의 4계절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개발

-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간월산, 신불산, 가지산 일대의 서북부 산악지대를 레저형 관광지로 개발

○ 산업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살려 한국공업발전의 역사적 발자취를 전시하는 박물관 등 산업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관광상품으로 공업역사 관련 자료와 기록을 홍보

- 울산의 독특한 산업 및 노동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발

8. 경기 : 지식산업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보전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 여가공간의 확충 및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나. 발전방향

(1)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 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정보인프라, 고급인력, 작업환경 등을 갖추고 있는 입지의 우위성을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

- 기존 제조업을 집단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벤처산업의 조성

- 외국인기업 전용임대공단 조성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기존 공단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 소프트웨어 단지와 정보통신 벤처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등 벤처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벤처산업을 집적화

(2)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보전

○ 접경지역의 전략적 계획 및 지원방안 마련

-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남북교류 확대에 따라 북부지역과 접경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적 계획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접경지역 관리방안 추진

○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북부지역의 발전 유도

- 김포, 고양, 파주축은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과 연계한 국제전시장,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를 조성

-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축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벨트를 조성

- 구리, 남양주, 가평축은 수도권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치

- 접경지역(민통선지역)은 개방가능한 안보시설과 일반관광자원을 결합한 안보관광과 남북협력관련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

- DMZ 일대에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나 생태학습지를 조성하는 방안 검토

(3)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 자족적 도시 육성을 위한 주요 발전축 중심의 기능 분산

- 파주-포천축은 남북교류지대로 육성하고, 서해안의 김포-평택축은 신산업지대를 조성

- 서울인접도시는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이천-가평축은 전원도시 및 관광벨트를 구축하며, 수원-이천축은 첨단산업 및 R&D 벨트를 구축

○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효율적 연계 구축

- 수도권 공간구조를 뒷받침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중심의 방사형 도로체계 개선을 위한 순환도로망체계를 구축

-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연결도로 및 철도망을 복원

-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전철 및 경기도내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순환전철망을 구축

- 물류단지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서울 집중의 물류를 분산처리하기 위한 복합유통단지를 서울외곽의 교통결절지역에 조성

○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추진

- 도시정비 및 개발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수환경 이용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준농림지의 계획적 개발

- 토지이용조례 또는 지침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 유도

○ 도농복합시 공간계획 및 규제제도의 개선

- 도시계획구역내와 구역외 지역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동시 수용방안을 모색

(4)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여가공간 확충

○ 청소년 교류 생태·안보관광 기반 조성

- 통일전망대, 땅굴, 임진각 등을 잇는 국제적인 안보관광지 및 자연생태학습지를 조성하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

○ 여가위락 관광벨트 및 도예 관광벨트의 조성

- 동부권의 수변·산악자원을 연계한 여가위락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이천·여주·광주를 연계한 도예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경기도의 전통, 역사,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

○ 국제적 해양위락관광벨트 조성

- 남서 해안지역은 도시근교 여가기능을 담당하는 해양위락 관광지로 개발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서해안 관광권을 구축

(5)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임진강 수계의 보전 및 이용

- 북부지역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임진강은 통일후 활용가치가 증대될 전망이므로 수해방지, 수질개선, 전력공급 차원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수계의 종합적인 관리방안 모색

○ 광역 녹지네트워크의 구축

- 광역녹지축의 보전과 연계를 위하여 인접 도와 협력하며, 백령도에서 비무장지대를 거쳐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수평축과 서해안 해양도서·갯벌축을 활용한 광역 생태녹지축을 구축

9. 강원 : 환동해권 관광 · 휴양산업 전진기지

가. 기본목표

○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망 확충
○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

나. 발전방향

(1)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 원주권-강릉권간 동서내륙 리조트·산업벨트의 조성

- 고속도로 확장, 철도개설 등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고 21세기 전원주거와 휴양·산업지대 조성

○ 접경지역 민족통일 평화지대의 조성

- 남북교류도시 및 세계평화광장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지역을 개발하고, 민족휴양·거점지대를 조성

-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공원, 시범 생태마을·도시, 생태연구소 등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지원방안을 모색

○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의 구축

- 중앙고속도로를 축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생물·환경산업, 의료건강산업 등의 지식기반 산업과 관광·휴양산업을 연계 육성

○ 신국토축인 환동해축 완성을 위한 강원동해안 광역권의 개발

- 전통과 현대, 산악과 해양, 업무와 관광이 조화된 복합관광지대를 구축

- 해양 및 연안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관리하고 LNG 공급 등 청정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설악-금강산 국제관광자유지대의 조성

- 설악권의 국제관광 역할을 제고하여 금강권과 기능적 보완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상징적 평화관광지대를 조성하여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 폐광지 개발촉진지구 중심의 태백권 고원 리조트지대 형성

-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지역내 핵심지구사업으로 카지노리조트를 추진하여 폐광지역진흥 및 고원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백두대간축의 종합관리 및 활용

- 산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며 대관령 일대에 강원(백두대간)역사문화촌을 건설하는 등 관광테마상품화

(2) 교통·통신망 확충에 의한 대외 교류협력기반 강화

○ 국가기간교통망의 확충 및 물류거점기능 강화

-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등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동서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등 국가기간고속도로망을 확충

- 주요결절점에 물류기지를 건설하여 물류거점기능을 강화

○ 육상교통망 정비와 항공 및 항만시설 확충

- 원주-강릉간 철도 및 동해선 철도를 부설하고 경춘선을 복선화하여 동해안까지 연장하는 등 철도망을 확충하고 국도확장 및 터널화 등 도로망 정비

- 양양국제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동해항 등 기존항만을 확충하며 동해안 국제신항만을 건설

○ 「정보화 21」 운동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 구축

(3) 삼각 테크노밸리(Triangle Techno Valley)의 추진

○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권의 기능집적도 및 상호 연계성 향상

- 춘천권은 멀티미디어·에니메이션 영상산업과 생물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문화산업도시로 육성

- 원주권은 의료전자 및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를 통하여 물류·정보통신도시로 육성

- 강릉권은 해양 및 신소재와 연계된 지식기반산업, 정보기술과 관광이 접목된 문화예술·산업도시로 육성

○ 대북 및 대환동해권 거점산업벨트로 육성

- 삼각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수도권 춘천-원주간 신산업 벨트, 원주-강릉간 리조트·휴양산업벨트 및 강원동해안 광역권의 임해산업벨트가 연계되는 도농복합형 광역청정산업지대를 형성

(4) 관광 인프라 정비 및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

○ 21세기 생태형 도시 조성 및 관광거점도시기능 보강

-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수도권 인근에 전원생태시범도시의 건설을 추진

- 도시 및 소도읍의 경관형성계획을 추진하며 농산어촌의 관광거점기능 육성

○ 관광수용시설의 확충 및 회의산업의 유치

- 국제수준의 해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광수용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관광사업을 추진하며, 삼각 테크노밸리 거점도시 및 관광거점도시에 회의시설을 확충

○ 농림어업 및 기존산업의 관광연계와 고부가가치화

- 기존 산업을 첨단화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

- 농림어업을 생명산업 및 관광·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연고산업을 진흥하여 제조업을 첨단화하고 고부가가치화

- 새로운 양식품종 발굴, 천해어장 조성 등 신어업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관광어촌 육성

○ 산림자원의 육성과 자연친화적 활용

-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생산하고 관광 및 휴양자원으로 활용

10. 충북 : 내륙 신산업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정보화 선도지역 형성
○ 자연환경과 중원문화의 조화에 의한 내륙문화관광 육성
○ 지역발전축 형성과 권역별 주기능 육성
○ 중부권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나. 발전방향

(1) 지식기반의 첨단정보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 오송·오창은 보건의료, 전자정밀산업 중심의 21세기형 산업을 육성하고 진천·음성은 신소재, 디자인, 조립금속산업을 육성하며 충주·제천은 첨단산업을 육성을 통하여 북부권의 거점으로 육성

○ 초고속국가통신망 및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경쟁력 강화

-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지역내 공동망을 구축하여 어디에서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 기반을 마련

-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산업·영농의 정보화 촉진

(2) 내륙 문화관광 육성을 통한 민족생태공원의 완성

○ 관광거점별 지구 지정의 차별화와 테마별 전략 설정

- 단양권은 야간위락, 제천·청풍권은 수변위락, 충주·수안보권은 문화온천, 보은·속리산권은 역사문화, 옥천·영동권은 자연생태 거점, 중부권은 첨단산업 위락지구로 육성

○ 인접 시·도간 관광벨트 구축 및 중원문화권의 체계적 육성

- 동서축으로는 중원문화관광권을 중심으로 한 황해관광권과 태백관광권을, 남북축으로는 동남권의 해양·고적관광과 서울·동해산악관광권과 연계되도록 관광결절지대 기능을 육성

- 주제공원을 조성하고 신소재 관광산업을 육성하며 백제문화-중원문화-태백고원문화를 연결하는 중부권 역사가도를 설정

(3) 인접지역과 연계된 지역발전축 형성 및 권역별 주기능 육성

○ 청주-충주-제천간 첨단지식산업벨트 조성

- 서해안 산업지대, 대전의 연구개발기능, 강원 리조트산업을 연계하고, 수도권 남부와 구미전자단지를 연결하는 내륙 첨단산업을 육성
- 지역내 고속도로의 횡단 및 교차로 첨단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 중동부지역을 신소재 중심의 내륙관광벨트로 육성

- 백두대간의 소백산～월악산～속리산 지역을 권역별로 차별화하고 백제문화권, 강원·경북지역과 연계하여 광역 관광개발지역으로 조성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권의 육성

- 중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청주와 역세권개발 및 첨단산업을 중심테마로 한 오송·오창신도시를 개발하고 증평의 청주권 위성도시화를 추진

○ 청정환경과 무공해농업, 연구개발기능이 결합한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육성

- 첨단영농기술센타를 중심으로 영농의 과학화를 주도하여 수도권, 영·호남권, 대전권을 대상으로 한 농특산품을 육성하고 도농간 연계기능을 강화

○ 권역별 중점기능의 육성

- 제천·단양의 산수관광권은 내륙관광의 중심으로 육성
- 충주·수안보의 역사문화권은 중원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 진천·음성의 산업육성권은 수도권 기능수용 및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
- 청주·오송·오창·증평지역은 중부권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
- 괴산·보은의 휴양관광권은 연수시설 유치를 통한 연수휴양기능을 확충
- 보은·옥천·영동의 과학영농권은 1+2+3차산업 전략을 통한 과학영농 선도지역으로 육성

(4) 지역과 국토가 융합하는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 중부권 국제교류의 관문기능 강화

- 청주국제공항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며 공항관련산업, 연구·개발·주거 등 복합기능을 구비한 공항단지를 육성

○ 효율적인 교통망의 확충

-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안중~삼척, 서천~영덕간 동서연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라권과 강원권을 잇는 연결 교통망을 구축

- 충북선을 전철화하여 동서연결기능을 강화하고 문경~충주~수도권간 철도를 신설하여 영남·충청권의 수도권 진출노선을 확보

○ 내륙화물기지 조성과 내륙항 기능 수행

- 대량수송시대의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유치하고 권역별 중소규모 물류단지를 조성

(5)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

○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

- 생명의 숲, 새천년 손자 숲 등 우량경제림을 조성하고 댐주변의 자연경관림을 조성하며 자연형하천을 개선하는 그린 네트워크사업을 추진

- 미래형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대청댐, 충주댐, 북부권 및 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위생적인 상수도를 보급

11. 충남 : 역사문화 · 임해산업 · 황해권 교류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지역 창조
○ 지역특화산업 및 임해형 신산업지대 조성
○ 도시 및 농어촌 개발·정비에 의한 도·농 통합과 삶의 질 향상
○ 통합적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과 농림어업의 선진화

나. 발전방향

(1)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입체적 개발

○ 권역별 거점관광지의 육성

- 온천휴양지역, 해양리조트지역, 해안지역, 백제고도지역, 대전근교지역 등 권역별 기능별 거점지역을 설정하고 거점별 관광기능을 중점 육성

○ 서해안 연안관광벨트의 구축

- 경기, 충남, 전남북을 잇는 연안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안면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여 서해연안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육성

- 해안국립공원과 연계한 크루즈항 육성 및 크루즈 루트 개발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

- 백제고도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백제문화권개발 및 예당평야를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 개발 등을 추진

-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축제를 국제화하고 전통놀이·민속을 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2)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임해형 신산업지대 조성

○ 도 전역을 삼각축으로 하는 신산업벨트 구축

- 북부권, 동·남부권, 서해안권을 3각축으로 연계하고, 권역 및 특정 산업구역을 지정하여 특화된 산업을 전략업종으로 집중 육성

- 철강 및 중화학산업, 첨단정보산업, 관광휴양산업, 친환경적산업 등과 이들을 연계하는 산업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

○ 임해형 신산업의 육성과 산업의 집단화 및 협업화

- 항만배후지에 임해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중소벤처기업의 협동화단지 개발·고부가 지식기반산업 등을 중점 지원

-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모색하며, 경공업은 고급화, 패션화된 전문제품을 중심으로 집단화 및 협업화를 추진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및 정비

○ 신도시 개발 및 소도시활성화에 의한 도농간 균형개발

- 아산만권 및 서해안권역, 산업단지 등의 배후도시로 복합신도시를 개발하여 산업과 교역기능을 배후지원하고, 특화 및 기능도시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구의 지방정착기반을 마련

- 농어촌지역의 정주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활력화거점으로서 소도시를 활성화하고 도농의 통합과 균형개발을 촉진

○ 생태녹지축 형성 및 생태도시 육성

- 서해안 청정지역과 내륙 녹지대를 네트워크화 하는 생태녹지축을 형성하고 다양성, 안정성, 순환성을 갖춘 생태도시를 육성

(4) 국토를 연계하는 통합적 교통 및 물류체계의 구축

○ 고속 교통체계구축과 취약한 교통망의 확충

- 경부고속철도를 계획대로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을 추진하여 고속교통체계를 구축

- 서해안~내륙~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등 동서연결 교통망을 확충하고, 서남선 철도와 연계하여 아산만권 임해공단의 배후 산업철도망을 건설하는 방안 추진

- 장항·서천지역 임해산업지대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와 배후지역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하여 장항선을 복선화하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대전-논산-서천간 고속화 도로, 주요간선도로 확장 등 지역교통망 확충

○ 대중국 및 환황해권의 교역기지화 및 광역물류체계의 구축

- 장항항, 보령항 등 서해안지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중부권 복합물류기지, 수산물·인삼약초·과수원예 등의 특화유통단지를 건설하여 광역물류체계 구축

○ 취약한 항공망의 보완

- 낙도·오지등 낙후지역의 연결 및 관광지와의 연계를 위해 여객선·유람선 및 경비행기·헬기 등 입체적인 교통망 보완 추진

(5) 선진화된 농·임업과 풍요로운 어촌개발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업테마파크 조성

-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등 영농지식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농업중심지역으로 발전

- 고부가가치의 화훼산업 육성과 국제 꽃박람회 개최 등 정착기반 마련 및 해외시장 개척

○ 축산업 및 임업의 육성

- 축산업을 집단화 및 전업화, 선진화하고 휴양림 조성 및 산림산촌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산림의 생산성을 제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육성과 어업기반시설 확충

- 연안역 개발과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해양관광개발 및 생태계 보전을 추구하고 해양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어업을 활성화하고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원양어업전진기지를 육성

12. 전북 : 환황해권 생산 · 물류 전진기지

가. 기본목표

○ 환황해권 및 국토발전의 신중심지역으로 도약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발전
○ 인간,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지역문화의 창출
○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나. 발전방향

(1) 환황해권 생산·물류 중심지로서 기반 확충

○ 열린 전북을 위한 자립적 국제교류기반의 확보

- 환황해권 교류의 관문으로서 국제교류기반을 확충

  ※ 새만금 관련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반영하여 추진

- 전주의 영상문화산업 수도화와 전북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전주신공항 건설

○ 물류기반시설의 구축

- 군장권, 전주-익산권, 남원권, 정읍권 등 간선교통망의 교차지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증대될 국제간, 국내간 물류수요에 대응

○ 지역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여건의 개선

-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산-포항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전라선을 복선화 하는 등 고속도로, 철도망을 확충·정비

(2) 경쟁력있는 신산업의 육성 및 매력있는 입지환경의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있는 신산업의 육성과 산업지대망의 구축

- 지방거점도시로서 전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영상산업을 적극 육성

-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을 환황해권 첨단산업 및 신산업발전의 거점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 21세기 전북지역발전을 주도할 신산업의 하나로서 메카트로닉스, 신소재산업 및 육종산업 등 생명과학산업을 특화·육성

- 군산수출자유지역 육성을 추진하고, 기존의 니트(의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고도화

○ 농도로서의 위상강화와 새로운 농·임·어업의 전개

- 수출지향의 특화된 농업기반을 구축하며,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

- 다산업 복합경영 측면에서 산림산업을 농업 및 생명과학산업과 연계시켜 적극적으로 육성

- 제2의 국토인 해양자원을 어업, 수산업, 관광업 등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바다산업을 육성

○ 지역잠재력을 활용한 매력있는 입지환경의 조성

-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의 조성 및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이고 정보집약적인 배후도시를 조성하며, 청정에너지와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

(3) 유기적인 도시 및 지역체계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의 추구

○ 도시간 연대 강화를 위한 광역적, 특화적 도시체계의 구축

- 전주·군장광역권을 21세기 신산업의 요람, 정보의 거점, 동북아 교류의 중추지역으로 개발

- 전주-익산-군산을 연담도시권으로 개발하여 중추관리기능을 보강하며, 권역내 연계강화

- 김제, 남원, 정읍 등 농·산·어촌의 중심도시들은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거나, 정보 및 도시기능을 확충하여 자립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신자원활용지역으로서 농·산·어촌의 적극적 활용

- 작지만 아름다운 다자연적인 농·산·어촌형 신도시 모델을 개발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창출

-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체험형 여가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4) 통합적 문화·관광권의 구축 및 세계적 지역문화의 창출

○ 자연적 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 서해안권은 변산, 격포 등 다양한 해안관광자원과 내소사, 고창 고인돌, 내장산, 강천사 등 내륙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개발

- 지·덕권은 지리산 및 덕유산을 중심으로 5도 11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관광개발사업을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추진

- 동부레포츠·산악권은 덕유산 국립공원 등을 녹지생태축으로 연계하는 레포츠·산악문화·관광권으로 개발하고 무주등에 동계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접근시설을 확충

- 중부 도시역사권은 전주, 익산의 마한, 백제 및 조선조문화를 공주, 부여 등 금강연안문화와 연계 개발함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 개성과 전통이 있는 지역문화의 발전과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 대사습놀이, 띠뱃놀이, 전통 먹거리문화, 세계소리축제 등 독특한 지역문화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산업으로 승화

- 만경강 생태공원, 오수 충견, 장수 논개, 남원 춘향, 마이산 등 지역명소를 관광자원화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승과 전주의 전통문화특구화 추진

(5)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구축

○ 감재대책의 강구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치산, 치수의 강화 등 종합적인 감재대책의 강구하에 지역개발을 추진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담댐, 섬진댐, 부안댐, 동화댐에 대한 수질 및 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

○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술, 문화접촉의 기회 확대

13. 전남 : 국제교역 · 해양관광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첨단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 국제적 해양관광 기능의 강화와 해양지향적 교류기반의 확충
○ 향토문화의 복원·계승 및 관광산업의 육성
○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보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나. 발전방향

(1) 지역별 개발전략의 특성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 거점도시권의 형성과 배후지역의 개발

- 광양만권은 대 태평양 전진기지로 육성하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입 화물처리, 부가가치 물류 등 국제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광양만 일대는 국제자유무역기능을 확보하며, 산업공간 및 배후도시확충으로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하여 광양만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목포권은 대 중국 및 동남아 전진기지로 육성하되 국제교역 및 도청이전에 따른 행정기능을 강화하며 신산업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이를 위해 신공항, 복합행정타운 등을 개발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을 육성

- 광주대도시권은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휴식 및 정주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육성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생물산업, 조선 및 항공산업, 정밀화학, 신소재, 물류, 전자·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

○ 지역정보화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촉진

- 농어촌, 도서지역에 원격교육, 원격의료, 텔레뱅킹 등 첨단정보체계를 구축
- 거점도시권에 국제정보허브도시를 개발

(2) 국제해양관광 기능의 강화 및 해양지향적 교류기반의 구축

○ 국제적 해양관광의 거점화

- 남도역사문화, 수산물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허브관광도시 기능 강화
- 여수의 해양엑스포에 대비하여 도로, 연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엑스포 개최이후 지역경제와 연계방안을 모색
- 화원관광단지-고하도-압해도-무안공항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평화, 협력을 주제로 하는 뉴밀레니엄 해상테마관광을 육성하여 21세기 신해양시대에 대비
- 도내 도서를 활용하여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 국가 특색을 나타내는 테마파크섬을 장기적으로 조성하여 국제적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

○ 동북아권 해양교류기반의 구축

- 21세기 동북아 중추항으로 광양컨테이너항, 목포신외항을 건설하며, 목포항을 재정비하며, 추가적인 항만수요에 대비
- 무안공항을 호남권 중심거점 국제공항으로 건설하고, 여수공항을 광양항과의 연계하에서 화물수송 기점공항으로 기능하도록 확충
- 항만, 공항, 신산업지대로의 접근도 제고 및 거점도시권과 주변지역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시설별 인입선 철도 및 연결도로망 등 건설

(3) 향토문화의 계승·복원과 관광자원화

○ 향토문화의 계승 및 복원

- 진도 영등제, 남도음식축제 등을 남도 특유의 지역축제로 승화
- 강진, 해남 등을 연결하는 청자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시대별 전통도자기를 재현, 전시하고,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

○ 역사문화환경자산의 관광자원화

- 마한·백제문화권, 장도 청해진, 여수 이충무공 전적지 등 문화유적지와 해남·보성·화순 공룡화석지, 화순 고인돌 선사유적지 등 자연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 태백산맥, 토지 등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 영산강 제모습찾기, 역사탐방로 구축, 서남해안 갯벌을 활용한 수산물 채집 및 미용관광 등으로 생태체험관광을 활성화

(4)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연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개선

- 탐진댐, 평림댐, 광양 III, IV단계 공업용수도를 건설
- 해수 담수화 시설확충 등으로 해안·도서지역에 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등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며, 주암호 등의 수질보전을 강화

○ 자연생태계의 보전

-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연안어장을 정화하고, 효율적인 어장정화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확충

- 갯벌생태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목포권에 갯벌자원연구소 및 박물관을 건립하고, 주요 해안 및 연안습지, 도서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관리

(5) 지역통합적인 교통·물류망의 구축

○ 지역통합적인 광역교통망의 구축

- 광주-망운간, 광주-완도간, 목포-광양간, 여수-광양-전주간, 고창-장성간 및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건설을 통해 동서간 및 남북간 광역교통망의 골격을 형성

- 다도해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를 건설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며,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관광활성화, 연육·연도교 자체의 관광상품화

- 연안관광지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을 추진

- 지역균형개발과 동서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전선 광주-광양 구간의 직·복선화 및 목포-보성 구간의 건설을 추진하며, 전라선 철도의 복선화 추진

- 호남고속철도의 건설로 전국토를 반나절 생활권화

○ 물류유통단지의 조성

- 호남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

- 중서부지역, 광양만지역, 남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

14. 경북 : 환동해권 첨단산업 · 문화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정보·과학기술 혁신으로 하이테크화 실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과 문화관광지역의 실현
○ 지역균형 발전축 구축과 권역별 특성화 개발
○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친환경적 개발

나. 발전방향

(1) 과학기술혁신과 지역정보화로 첨단과학경북 구현

○ 테크노네트워크 및 정보인프라 구축

- 포항, 구미, 경산, 안동 등 지역거점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네트워크화

-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정보통신산업연구단지의 조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거점인 텔레포트를 건설하고 시군마다 지역정보센타를 설립

○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 구미 등 중서부내륙은 국가과학산업이나 기술혁신 지향적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육성

- 경산 등 남부도시지역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테크노파크와 섬유기계단지 등 관련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지식 섬유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2) 문화유산의 보존·전승과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

○ 경북 문화르네상스 실현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국제유교문화제, 경북문화산업비전을 추진하는 등 문화의 세기를 선도하는 사업을 추진

○ 문화·지식산업의 육성과 기반조성

- 경주 등에 컨벤션센터를 건설하여 국제회의도시를 육성하고, 문화산업단지 등 고부가가치의 문화·지식산업을 육성하며, 영상, 음반,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개발

○ 신라불교문화, 가야문화, 유교문화 등 3대 문화권의 개발

- 북부권의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세계유교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과 동해안지역을 연계하여 세계문화·해양 관광지대로 개발

- 고령·성주의 가야문화 보존·정비와 가야산 국립공원 개발 등 가야문화와 연계하여 대구근교권을 개발

○ 청정 동해안 문화삼각코리도의 형성

- 동해안과 인접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문화삼각코리도로 형성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역사문화, 항구, 온천, 섬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제온천타운, 씨월드, 관광휴양지, 해양레포츠 단지 등을 조성

○ 광역권 관광개발 및 국제관광벨트 조성

- 해상관광벨트(금강산~울릉도~제주도), 동해연안관광벨트(설악산~울진~영덕~부산), 5도 문화관광지대(덕유산주변 김천~영동~금산~무주~거창) 조성

- 3도 관광벨트(속리산~월악산~소백산~태백산)와 환동해국제관광벨트(포항~금강산~나진·선봉~블라디보스톡~홋카이도~니이가타) 조성

(3) 신국토축과 연계한 지역발전축 구축과 권역별 특성화 개발

○ 신국토축과 연계한 동서3축, 남북4축의 지역개발축 형성

- 동서3축은 신국토축인 포항~군산의 남부내륙축과 영덕~청송~안동~상주축, 울진~봉화~영주~문경축을 형성

- 남북4축은 신국토축인 환동해축과 봉화~청송~영천축, 영주~안동~대구축, 문경~상주~김천축을 구축

○ 4대권역별 특성화 개발로 균형있는 통합공동체 실현

- 북부자원권(안동·영주·문경시, 청송·영양·예천·봉화군)은 유교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지식 및 벤처농업의 거점지대로 육성하며, 북부권 개발촉진지구 추진

- 동부연안권(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은 포항 영일신항만과 연계하여 태평양시대 국제교역 중추거점지로 육성하고, 신라문화와 동해연안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세계적 문화·관광·휴양지대로 개발하며, 독도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추진

- 중서부내륙권(김천·구미·상주시, 군위·의성군)은 첨단산업 및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신지식·환경농업의 애그로폴리스를 육성하여 도농복합의 전원도시를 개발

- 남부도시권(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칠곡군)은 대도시 인근의 특성을 살려 근교농업을 육성하며 환상의 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문화·레저중심의 배후전원도시 및 학원도시로 육성

(4) 교통·물류체계 개선으로 편리하고 경쟁력 높은 공간구조 구축

○ 전국 반일 생활권화와 입체적 광역교통망의 구축

- 울진공항(경비행장)을 건설하고 포항·예천공항 등 기존 공항을 확충하여 항공수요에 대처하며, 울릉도 항공교통시설망 확충

-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김천~진주간, 문경~충주간, 울진~분천간 철도 등을 부설하여 철도의 수송분담기능을 확대

- 포항~군산축, 영덕~서천축, 포항~삼척축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88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

○ 물류·유통체계의 재편

- 영남권 복합터미널 계획확정 후 기능 및 규모를 정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권역별로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유통체계를 확립

(5) 환경친화적 개발과 농어업의 신지식 산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그린낙동강의 실현

- 그린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낙동강을 역사와 문화의 강으로 보존·개발

- 낙동강 환경보전 및 개발계획, 동해안 종합개발 및 환경보전계획 등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추진

- 그린 에너지시범단지 조성등 21세기형 청정·그린 에너지를 개발

○ 고소득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및 신유통체계의 구축

- 중서부내륙에는 농업테크노파크 및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벤처농업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 및 지역거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신유통체계를 구축

- 과채류 수출농업단지 조성(고령, 성주)

15. 경남 : 첨단기계산업 · 문화관광 선도지역

가. 기본목표

○ 기술·지식·정보기반에 의한 첨단기계산업의 메카 육성
○ 국제교류의 전진기지 기반 구축
○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기반에 의한 문화생태형 관광거점 조성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기능특화

나. 발전방향

(1) 기술·지식 정보기반에 의한 첨단산업의 메카 육성

○ 기계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육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메카트로닉스산업을 21세기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창원을 중심으로 양산～김해～창원～마산～진주를 연결하는 테크노벨트에 연구·창업보육시설과 전문생산기능을 육성

- 항공·우주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며, 사천과 진주를 항공·우주산업기반을 구축

○ 특화기술과 잠재력 기반에 의한 신산업의 육성

- 진주·밀양을 중심으로 식물유전자 및 해양분야에 특화된 생명공학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통영·고성·거제는 복합해양수산업단지로 조성

- 통신·멀티미디어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원～마산～김해 일대에 연구생산기반을, 거창은 반도체 및 컴퓨터산업을 육성

- 환경개선을 위해 폐수처리 및 대기정화, 해양오염감소 등 환경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마산, 함안에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기반을 구축

○ 지방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방중심의 유연적 기술지원체제 및 전문인력공급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경남유치, 특성화한 도립과학기술대학 시스템 구축 등 21세기형 지방의 지식기반형 기술인력을 양성

(2) 열린 경남을 지향하는 국제교류의 전진기지 기반구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부합하는 기간교통망 구축

- 영·호남간의 교류를 원활히 도모할 수 있도록 동서연결축인 군산~함양~포항간 고속도로와 포항~울산~부산간 고속도로를 연계하며, 경전선 철도의 보성~진주~마산간 복선화사업을 추진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과 울산~부산~경남을 연결하는 순환교통망 등 대도시권 교통체계 확립

- 남해안 일대의 수려한 해양관광지와 도서를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의 추진과 거제~부산간 연륙교의 건설

○ 양항체제의 보조항 육성 및 지역거점공항의 국제화

-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두보인 부산신항만의 진해용원항을 건설하여 국제물류거점으로 활용

- 마산항을 부산항/가덕항의 지원항, 삼천포항을 남해안 연안해운 거점항, 통영은 남해안관광벨트상의 크루즈거점항으로 육성

- 사천공항을 확장하여 광양만·진주광역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신산업지대의 수요에 따라 국제화물공항 기능을 확충

○ 지역정보화 기반의 획기적 확충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 국가 초고속정보망과 연계한 지역정보센터를 위계별로 조성하고 마산항 배후 텔리포트 건설로 국제정보네트워크를 확충

(3)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기반에 의한 문화생태형 관광거점 조성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 경남 전역에 걸쳐 분포된 가야문화권 복원 및 정비를 조속하게 추진하여 경남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지로 육성함

- 조선 양명학 및 유교문화의 복원 및 정비, 전통한의학 성지, 임진왜란 및 6·25전쟁 관련유적지, 사찰 등 전통역사·문화 관광지를 조성

○ 생태자연자원의 관광자원화

- 소득증대 및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보양·휴양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남부지방의 온난한 기후와 수려한 자연을 기반으로 보양·휴양기지 조성

- 남해안의 해양생태를 자원화한 남해안관광벨트권을 중심으로 내륙 서북부 및 동부산악권의 산악생태와 낙동강유역의 내륙습지 및 수변 생태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 육성

○ 권역별 공간구조의 기능 특화

- 동·중부도시권은 기계·자동차·조선산업 등 특화산업을 첨단화·고도화시킬 수 있는 특화산업첨단축으로 발전유도

- 서부도시권은 항공·우주산업과 생명공학 및 물류산업축으로 개발

- 서북고원권은 관광·정보 및 물류산업축으로 발전하는 서북신산업축으로 육성

- 남부해양권은 해양관광과 국내외교역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관광축과 국제물류축으로 유도

- 낙동강유역권은 생물산업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축을 조성

16. 제주 : 국제자유도시

가. 기본목표

○ 환경친화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건설
○ 첨단산업 육성으로 자립경제기반의 구축
○ 제주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동북아 관광 중심축으로 부상

나. 발전방향

(1)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

○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 21세기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관광, 비즈니스, 물류, 교역, 금융 등 지식기반 산업의 복합적 전략기지로서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건설

- 동북아 경제 및 학술 교류·협력의 장이자 분쟁해결의 장으로서 각국 정상회담 및 주요 국제회의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리조트형 컨벤션 센터 등 물적 기반을 구축

(2) 첨단산업 육성으로 자립경제 구축

○ 첨단 생명공학산업의 육성

-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존, 개발하고, 제주도 특화의 유전자원으로 활용

- 제주의 청정환경과 유전공학을 결합한 농·수·축산물의 종자생산 기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 21C 신해양 시대에 부응하고, 첨단생명공학의 기반구축을 위해 해양수족관, 미래해양관 등을 갖춘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을 건립

(3) 제주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동북아 관광 중심축으로 부상

○ 동북아 국제관광의 중심지로 부상

- 2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보전과 재조명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역문화 및 문화인프라를 구축

- 청정한 자연환경, 특이한 섬문화 등 관광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세계적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메가리조트단지를 조성

○ 지역문화의 세계적 관광자원화

- 제주역사의 발원지인 삼성혈을 중심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광민속관 등 인근 문화시설을 연계한 제주문화벨트를 조성

- 성읍민속마을, 표선민속관광단지, 해수욕장 등을 연계한 동부권 문화관광벨트를 구축

- 탐라국 유적지인 삼양지역과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적이 산재한 화북지역을 하나로 연계시킨 탐라시대 역사문화권을 개발

(4)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

○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주도 전역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서 청정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개발

○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보전

- 지하수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수문지질도 작성 등 자원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

- 중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해역을 보전함으로서 21세기 관광·환경도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

제 5 편
계획의 실천력 강화

제1장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제2장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제3장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제1장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1. 투자재원조달의 기본방향

가. 국토개발 투자재원 조달방안의 다양화

○ 투자재원 확충방안으로 중앙정부 재정지출외에 지방재정능력 확충, 사용료 및 수수료에 의한 조달, 민자유치 등을 강구

○ 투자재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징세비용, 수수료, 자금조달의 부대비용과 간접효과, 거시경제효과 등을 감안하여 투자재원 조달방안 결정

○ 국토개발사업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재원조달방안 적극 강구

나.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역할 설정

○ 환경보전, 치산·치수, 전국적 교통망 등 공공성이 강하고 지역개발 효과가 큰 국토개발시설의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재정으로 조달

○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적인 편익이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내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재의 투자재원을 확보

○ 개발사업의 외부효과가 크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은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

○ 수익성이 충분한 국토개발시설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되 행정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공공성만을 확보

-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민자유치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달비율을 제고

다.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에 중앙정부 지원을 차등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지원이나 공공투자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억제하는 방안 강구

2. 투자재원 조달방안

가. 국토개발 투자재원 조달능력 제고

○ 현재 20% 수준인 조세부담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함에 따라 증가하게 될 전체가용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투자우선순위 조정체계를 강화

○ 시장기능을 활용한 국공채 발행의 활성화

- 장기채 위주로 발행하되 시장실세금리를 반영
- 국공채발행이 가능한 부문에서는 신규발행을 적극 검토하며,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

○ 기금 등으로 분산집행되고 있는 국토개발 투자재원간의 통합조정체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하여 투자효과 제고

○ 지방재정의 대폭적 확충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의 탄력적 운용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강화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구조 개편을 통해 국토관리 재정력을 보강

나. 수익자부담 원칙의 강화

(1)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 공공요금정책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적정투자재원 확보와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

-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가격을 통한 수요조절기능을 강화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

○ 지나치게 다양한 기존의 수수료 및 사용료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공공요금 수준을 설정

-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시설 이용료, 철도요금 등

- 장기보관 및 화물지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치허용일수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

○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관한 재량권을 확대하되, 상하수도, 교통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발행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총량규모를 설정하고, 지자체는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계획 수립

○ 기금이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정부재정자금과 시장공모를 통해서 지방채 인수를 확대하고, 공모채 인수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강화

○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예: 미국의 지방채은행, 일본의 지방금융금고 등)의 설립검토

다. 국내외 민간부문의 활용

(1) 민자유치의 활성화

○ 국토개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 공공부문은 공공성이 강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주력하여 작은정부 지향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지방화

- 민자유치사업은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영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기업활동의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

- 정부의 제한된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유인이 많은 수도권에 민자유치를 확대하고 정부는 지방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 정부와 민간부문간에 경쟁적·보완적 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의 여건 마련

-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경영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외에는 최소한의 사후 감독기능만 유지

- 민자유치에 네거티브시스템을 적용하여 대상사업을 확대하되 민자유치 총량규모는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대

○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책 등을 강구

- 민자사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 개발촉진지구, 지방재정력 취약지역 등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재정지원, 토지이용 등 지역별로 차등적인 민자유치전략 수립

○ 민자사업에 있어 다양한 민간참여방식의 허용

- 민간의 사업참여에 따른 위험감소를 위해 민관합동법인 설립 추진

- 민자유치전략 수립시 새로운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도 민간부문을 참여

- 정부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이를 민간부문에 매각하는 방안 검토

○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투자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

- 중소기업이라도 사업의 운영 및 기획능력이 뛰어날 경우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금융기관도 단순히 재원을 지원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

(2) 외국자본의 국토개발사업참여 확대

○ 외국인 주식투자, 외국법인의 민자사업 참여와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상업차관의 도입을 적극 추진

○ 외국법인과 국내법인 공동의 민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유인장치 강화

제2장 국토계획의 법적 · 제도적 기반강화

1. 가칭「국토기본법」제정추진

○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제정

- 개방형 통합국토축 실현,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의 대비, 친환경적 국토관리 등의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

※ 국토계획의 절차법에 그치고 있는 현행「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확대·개편하여 국토관리의 이념법 및 실천법으로서의 성격 부여

- 국토에 관한 최상위법의 지위 부여 및 국토이념의 선언

• 개발과 보전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국토의 공공성 천명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화합 도모

-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보완체계 구축

• 일정기간(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 수정여부를 재검토

- 국토종합계획의 시·도 계획 및 하위 계획(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관계정립 및 연계성 확보장치 마련

-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제도 도입

2.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 국토종합계획에 제시된「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국토균형발전추진단」설치

- 수도권집중억제·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정책의 조정·발의, 사회간접자본의 지역간 투자조정,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지원 등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 수행

- 부처간 조정·통합과 집행기능을 수행

※ 프랑스는 1963년 총리직속으로 DATAR(국토지역개발기획단)를 설립하여 부처간·지방간 지역발전정책을 조정·통합

3. 국토정책의 조정·통합 강화

○ 부문별 실천계획의 수립 및 예산과의 연계성 제고

- 국토계획은 장기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교통, 주택, 수자원 등 부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 지역에서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중단기 실행계획의 도입 검토

- 부문계획, 실행계획에 종합계획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과 투자사업의 내용을 제시

○ 효과적인 사회간접자본 건설투자를 위한「종합투자조정계획」수립

-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부문간 투자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국토발전성과 도모

○ 부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국토개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과 예산을 연계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중점지원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평가

4. 국토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범국민적 참여 강화

○ 국토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민·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범국민적 참여를 확대하여 국토계획 자체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제고

○ 각 주체별 효율적 역할분담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국토발전의 기본방향 제시, 관련법 정비, 재원 확충,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실천가능한 지역계획, 도시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역간에 다양한 협력 강화

- 민간부문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 협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선도 역할

- 주민 및 시민단체는 국토공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집행과정을 모니터링

제3장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1. 중앙정부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및 분권화 확대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기능분담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

- 중앙정부 : 국토정책의 기본방향 책정,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

- 지 자 체 :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조직구성, 재정운용에서의 자율권 확대

- 국토개발관련 계획 및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화 강화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시·도)계획 수립 및 집행의 활성화

• 지역특성과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자율적 지역개발·관리여건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 지방고등고시제도와 지방전문직선발제도를 통해 지역개발분야 전문인력을 선발

- 중앙부처 공무원의 지자체로의 파견과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유도

-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대학원, 민간기업 등 위탁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개발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도입

- 사업내용, 투자분담, 지원조건, 사업기간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에 협약 체결

-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 프랑스는 1982년에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 협약의 실행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재정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재원분담(matching fund) 제도 채택

- 비용분담비율은 사업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하되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국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가부담을 상향 조정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화합도모를 위해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우선지원하는 체계 구축

3.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분쟁조정장치 강화

○ 지역간 연대확대와 갈등해소를 위한 광역행정협의기구 활성화

- 자발적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광역행정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주체적 해결능력과 수평적 협력에 의한 갈등관리능력 강화

○ 광역도시권의 경우 인접도시와 기능분담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 연접부의 경우 개별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단절을 방지하고, 원활한 외곽연계 및 토지이용마찰을 최소화

○ 중앙정부의 위원회 등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활성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활성화,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관리·조정기능 강화

부록 : 2020년의 국토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1998	2020
도 시 화 율	%	86	92
수도권 인구비중	%	46	40
고 속 도 로	㎞	1,900	6,000
철도복선화율	%	29	80
GDP대비 물 류 비	%	16	10
주 택 보 급 률	%	92	106
1인당 도시공원	㎡	6.4	12.5
상 수 도 보 급 률	%	84	97